



전략지역심층연구 25-01

#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김성환 · 홍성우 · 김진오 · 박미숙 · 손은아

#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김성환 · 홍성우 · 김진오 · 박미숙 · 손은아

전략지역심층연구 25-01

##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인쇄 2026년 2월 23일  
발행 2026년 2월 27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02-859-2278)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6152-2 94320  
978-89-322-6119-5(세트)



## 국문요약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율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 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

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겟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 차례

<b>국문요약</b> .....	<b>3</b>
<b>제1장 서론</b> .....	<b>11</b>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	15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	22
<b>제2장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b> .....	<b>25</b>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	26
가. 빈곤의 뒷 .....	27
나. 금융접근성의 제한 .....	30
다. 노동고용 및 기업운영의 비용 절감 .....	33
2. 브라질 내 불평등 .....	36
가. 소득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	37
나. 지역별 소득불평등 .....	41
<b>제3장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b> .....	<b>47</b>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	49
2. 주요 결과 .....	52
3. 소결 .....	56
<b>제4장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b> .....	<b>59</b>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	64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	67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	75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	77
<b>제5장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b>	<b>81</b>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	83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	90
가. 저가 저품질 상품과 경제적 기회 .....	91
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제적 기회 .....	97
<b>제6장 결론 .....</b>	<b>101</b>
1. 연구 결과 요약 .....	102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	104
가. 브라질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한-브라질 공공 부문 간 협력 .....	104
나. 소비재 시장 진출 시 비공식 부문의 양분화 된 소비자의 특성 고려 ..	109
<b>참고문헌 .....</b>	<b>113</b>
<b>부록 .....</b>	<b>121</b>
<b>Executive Summary .....</b>	<b>130</b>



## 표 차례

표 1-1. 국가별 GDP 점유율(2024년) .....	15
표 2-1. 브라질의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변화(2023년) .....	41
표 2-2.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 .....	43
표 2-3. 권역별 빈민가(파벨라)(2022년) .....	44
표 5-1.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브라질의 소득 계층 분류 (2024년) .....	83
표 5-2. Bolsa Familia 지원금(2025년 기준) .....	87
표 5-3. 브라질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프로그램 수혜 여부와 일 인당 월평균 소득(2023년) .....	87
표 5-4.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 추이 .....	88



## 그림 · 글상자 차례

그림 1-1.	소득 수준별, 지역별 비공식 고용 비중(2019년) .....	18
그림 1-2.	비공식 고용과 공식 고용의 상대적 변화 .....	19
그림 1-3.	비공식 근로자 구성 .....	20
그림 1-4.	연령대별 비공식 고용 비중 .....	21
그림 2-1.	성별, 주요 요인별 근로자 비중 .....	28
그림 2-2.	고용형태별 소득 변동성 .....	29
그림 2-3.	대출 고려 수단(지난 12개월) .....	31
그림 2-4.	특성별 근로자 구분 .....	32
그림 2-5.	대륙별 지니계수(2021년 기준) .....	38
그림 2-6.	국가별 지니계수(2023년 기준) .....	38
그림 2-7.	브라질 연도별 지니계수 1 .....	39
그림 2-8.	브라질 연도별 지니계수 2 .....	39
그림 2-9.	브라질의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2024년) .....	40
그림 2-10.	권역별 지니계수 .....	43
그림 2-11.	빈민가(파벨라)의 분포 .....	44
그림 2-12.	브라질 도시와 농촌의 지니계수 .....	45
그림 3-1.	동태적 부의 이동성 .....	53
그림 3-2.	자산에 따른 소비자 한계소비성향 .....	55
그림 5-1.	브라질 기준금리와 연간 대출금리 예시(2025년 5월 기준) .....	89
글상자 4-1.	브라질의 '조건부 현금 이전(CCT)' 프로그램 개혁 추이 .....	65

# 제1장



#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비공식 경제는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란 공식 규제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그 비중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La Porta and Shleifer 2014). 비공식 경제는 상대적 규모는 작아도, 공식 부문으로 편입될 경우 사회경제적 이점이 적지 않다. 먼저,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formalization)하면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연금·실업급여·출산 및 육아휴가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륙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0~17년 기준 작게는 유럽경제의 약 19.4%가 비공식 부문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Latin America)는 각각 34.4%와 34%가 비공식 부문으로 집계된다(Quiros-Romero, Alexander, and Ribarsky 2021). 또한, 1인당 GDP가 낮을수록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비공식 부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공식 경제는 APEC Peru 2024 의제로까지 선정되기도 하였다.<sup>1)</sup> 1인당 GDP가 낮은 국가가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높아서 비공식 경제가 APEC 회원국들의 지대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 경제는 꾸준한 관심사였지만 비공식 경제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비공식 경제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순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노

---

1) 정확하게는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을 통한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가 2024 페루 APEC(APEC Peru 2024)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제시되었다. 해당 의제의 핵심적인 논리는 공식 경제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춤으로써 비공식 경제를 공식 부문으로 편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동자는 비공식 부문 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도 하고, 기업은 노동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비공식 노동을 이용한다. 개인과 기업이 내생적으로 비공식 경제를 선택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비공식 경제 내 경제활동인구에게 비공식 경제는 다소 불가결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공식 경제를 단순히 ‘불법’으로 간주해 제재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식화뿐 아니라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비공식 경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식 경제 내 구조와 메커니즘은 복잡할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공식 경제와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시 비공식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성격을 띤다. 공식 부문에서 실업률이 증가할 때 비공식 고용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비공식 부문에서 특히 많은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의 심리와 동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비공식 경제의 복잡성은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디지털 전환은 공식화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공식화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전환이 공식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공식화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quality)이 미비할 경우 디지털전환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의 반발이 심하면 정책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

연구 대상으로서 비공식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이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기관 설문조사(survey data)에 의존한다. 설문조사는 본질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응답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

연구가 쉽지 않음에도 비공식 경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도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해외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고 학계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비공식 경제 연구는 확장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대규모 개발도상국은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매우 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내수시장이 큰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의 기초가 될 비공식 경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6년 미중 갈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분절화되는 측면이 나타났다.<sup>2)</sup> 이는 선진국들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에 집중하던 한국이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선진국 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증가했고, 상대국의 노동환경·금융시스템·제도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파트너 국가의 실제 수요(needs)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고는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거시경제적 특성을 연구한다.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는 다소 미시경제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미시경제적 접근 방식에 의한 연구는 향후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종합적 통찰을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세 가지 거시경제적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써 브라질 정책 당국의 고민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비공식 경제 연구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에 집중하는 주요 이유는 브라질의 경제 규모와 브라질 비공식 경제 비중이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

2) Bai, Kehoe, and Perri(2019); 윤상하 외(2024) 참고.

3) 북한 경제를 추정하는 연구, 현금 이권이 지역 경제(비공식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노동 관련 정책이 국내 비공식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배유진 2024; 백영연 2024; 송현욱 2022).

달리로, 시장 규모가 커서 한국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이다.<sup>4)</sup> 또한 1인당 GDP가 라틴아메리카 내 주변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브라질은 국가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제도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며 비공식 경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관련 연구가 용이하다. 나아가 중남미의 경제적·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지역 내 중추적인 역할과 게이트웨이(gateway)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브라질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른 국가 분석의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국가별 GDP 점유율(2024년)

(단위: %)

국가명	GDP 점유율
미국	23.45
중국	19.12
EU	16.23
일본	4.76
인도	3.60
영국	3.38
브라질	2.10
캐나다	1.90

자료: World 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5. 11. 25.).

##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비공식 경제는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그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란 조세, 사회보장, 노동 규제 등 정부

4) [표 1-1]에서 국가별 GDP 점유율을 나열했다. 명목 GDP 기준이며, EU는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였다. 브라질은 인도, 영국에 이어 7위에 위치하였다.

의 감독을 피해 시장 기반의 합법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 다시 말해,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규제적 이유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비공식 근로자를 정의하는데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비공식 기업을 정의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Ulyssea(202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공식 등록된 기업조차도 매출을 축소 신고하며 조세를 회피하기도 하고, 많은 공식 기업이 일부 비공식 노동을 고용하여 노동 규제 준수 비용을 회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Ulysses(2018)은 비공식 기업을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과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으로 구분함으로써 비공식 기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외연적 확장은 기업이 등록하여 공식 지위를 획득했는지 여부, 내연적 확장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공식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공식적인 계약 없이 고용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공식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며, 특히 비공식 기업에 대한 정의는 비공식 노동에 비해 연구 목적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비공식 고용(informal labour), 비공식 기업(informal firm)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졌는지와는 별개로 비공식 부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비공식 고용의 상대적 규모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리(proxy) 지표는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sup>5)</sup> 이밖에 지표로 비공식 부문 내 모든 근로자와 공식 부문에서 비공식 직업(informal job)을 가진 비공식 근로자의 합을 비공식 고용 규모로 측정하기도 한다. 비공식 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의 규모, 등록 여부, 회계의 성실성, 조세 납부 여부,

---

5) ILO(1993); La Porta and Shleifer(2014).

금융접근성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공식 부문에 대한 정의와 측정 지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La Porta and Shleifer(2014)는 비공식 기업이 경제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적이라고 바라본다. De Soto(1989, 2000)은 비공식 기업을 미개척의 기업가적 에너지의 저장고로 바라보고, 정부 규제로 인해 그러한 기업가적 에너지가 억눌려 있다고 주장한다. Levy(2008)은 비공식 기업과 비공식 노동자가 조세와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누리는 이점을 강조하며 비공식 부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Lewis(1954), Harris and Todaro(1970), Rauch(1991)은 비공식 부문을 빈곤과 불평등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La Porta and Shleifer(2014)는 Lewis(1954)가 가진 이중(dual) 구조 관점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비공식 기업과 비공식 근로자는 공식 부문과 단절된 별도의 경제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공식화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를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서로 다른 노동, 자본, 생산요소, 기술을 투입해 서로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Ulyssea(2018)의 실증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이중 구조 시각을 반박하고 있다. Ulyssea(2018)은 브라질 데이터를 이용해 공식 기업과 비공식 기업이 매우 엄밀히 정의된 동일 산업 내에서도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일 산업 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도 공식 기업과 비공식 기업 간 생산성 분포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sup>6)</sup>

한편 각국에서 비공식 부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회피, 정부 관료주의나 각종 규제 부담 회피, 공공 부문의 부패(corruption) 등이 지적된다.<sup>7)</sup> 또한 일부 노동자와 기업은 공식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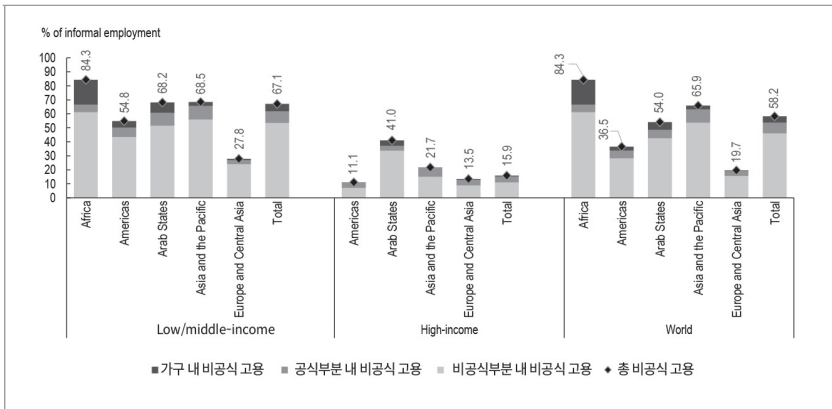
---

6) Meghir, Narita, and Robin(2015); Allen, Nataraj, and Schipper. (2018); Ulyssea(2018).

위한 과도한 진입 장벽과 낮은 인적 자본 수준으로 배제(excluded)되어 비공식 부문에 남게 되며, 이들은 대체로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저숙련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8) 또 다른 비공식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공식 부문에서 나와 유연성, 독립성, 그리고 규제 준수의 낮은 비용 때문에 비공식 활동을 선택한다.9)

다음으로 OECD(2023)을 토대로 비공식 기업, 비공식 근로자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자. ILO(2023)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전 전 세계 성인 노동력의 60%는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었으며, 전 세계 기업의 80%는 비공식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비공식 경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림 1-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프리카 지역 내 저소득 국가의 비공식 근로자 고용 비중은 약 84%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아랍계 국가, 중남미 지역 내 저소득 국가 순으로 비공식 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소득 수준별, 지역별 비공식 고용 비중(2019년)



자료: OECD(2023), p. 19, 재인용.

7) Elgin *et al.*(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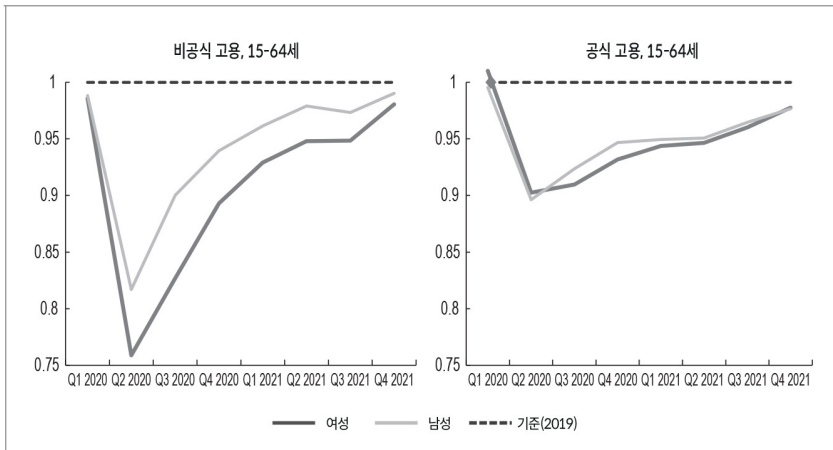
8) De Soto(1989); Loayza, Oviedo, and Servén(2006); Perry *et al.*(2007); Loayza(2018).

9) Blanchflower, Oswald, and Stutzer(2001); Falco and Haywood(2016); Günther and Launov(2012); Maloney(2004).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와는 달리 비공식 고용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불황기에는 비공식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공식 경제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일부 흡수하는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공식 근로자와 비공식 근로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로는 △봉쇄조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산업에 비공식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재택근무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비공식 노동자가 더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장기간의 활동 중단을 버티기 어려웠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sup>10)</sup>

또한 공식 부문과 달리 비공식 부문에서는 성별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연도에 비해 2020년 2/4분기 비공식 고용과 공식 고용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비공식 고용에서 남녀 간 고용 감소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림 1-2. 비공식 고용과 공식 고용의 상대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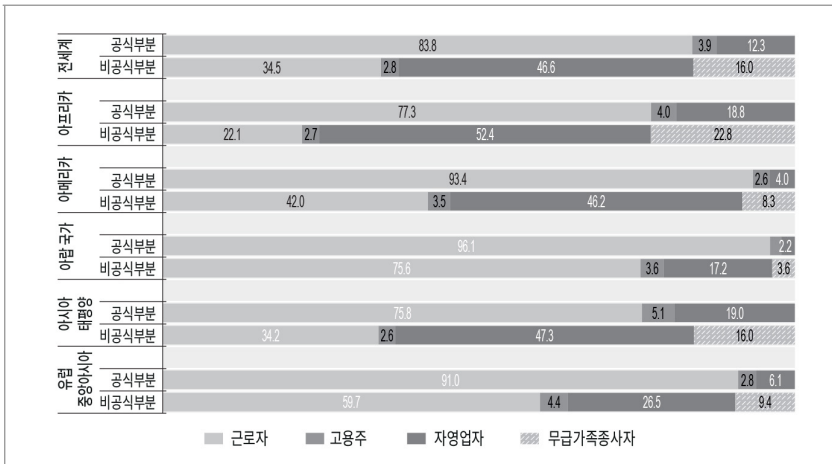
자료: OECD(2023), p. 24, 재인용.

10) OECD(2023), "Informality and Globalisation: In Search of a New Social Contract," p. 21.

반면, 코로나19 회복 국면인 2021년 4/4분기에는 비공식 고용의 회복세가 공식 고용의 회복 속도를 앞지르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주된 원인은 △많은 비공식 노동자들이 다시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복귀했다는 점, △기존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신규 인력이 가계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비공식 고용에 진입했는데, 주로 임시직 노동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자 형태였다는 점, △일부 기존의 공식 일자리가 비공식화 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sup>11)</sup>

다음으로 비공식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1-3]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 즉, 자신 이외에 근로자가 없거나 무급가족종사자만 있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임금 근로자(34.5%), 무급가족종사자(16.0%), 고용주(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하면 전체 비공식 고용의 62.7%를 차지하는데, 이는 공식 고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다섯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sup>12)</sup> 다만, 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국가에서는 비공식 고용에 자영

그림 1-3. 비공식 근로자 구성



자료: OECD(2023), p. 5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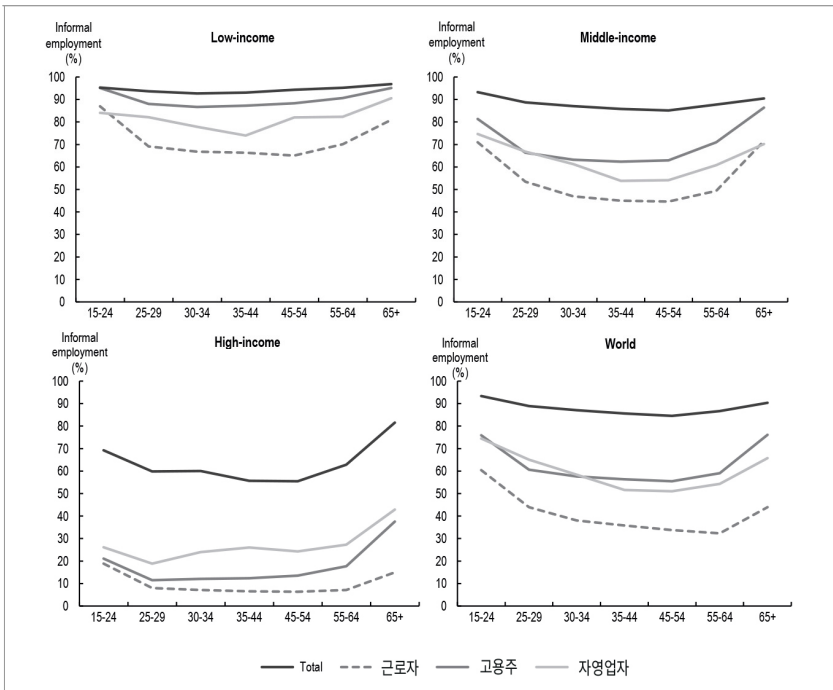
11) OECD(2023), pp. 23-24.

12) OECD(2023), p. 51.

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취약 고용 형태가 많은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비공식 근로자의 다수가 미신고 임금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밖에 산업에 따라 비공식 근로자의 비중이 있는데, 주로 농업,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비공식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 또한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비공식 근로 비중이 달라진다. [그림 1-4]에 따르면 15세 이후 비공식 고용 비중은 감소하다 은퇴 연령 시점에서 비공식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율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우 비공식 고용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80% 이상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1-4. 연령대별 비공식 고용 비중



자료: OECD(2023), p. 69, 재인용.

###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특징은 브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브라질의 비공식 부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첫째, 경제적 소외계층의 비중이 높고 경제적 이동성이 매우 낮다. 이동성은 크게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이동성으로 구분되는데, 브라질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이동성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 소득은 노동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소득이 낮은 비공식 노동자의 직업훈련과 기술 교육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유도한다. 동시에 정책적으로 공식 부문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고자 하지만, 실제 전환은 매우 제한적이다. 낮은 소득은 충분한 저축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부의 축적 및 이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둘째, 비공식 경제 내 금융접근성이 낮다. 우선, 공식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 비율이 높으며, 자산을 현금 형태로 보유해 공식 예금이 제공하는 이자수익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브라질의 전통적으로 높은 금리를 고려하면 이는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매우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예금이 비효율적인 가계도 존재하며,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문화적 요인 때문에 유동성(liquidity)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한편, 비공식 기업은 정책금리 혜택을 받기 어려워, 대출을 통한 자본 조달이 제한된다. 이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자본 투입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공식 등록을 마친 기업들도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을 통해 비공식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비공식 노동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 유인이 존재한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역시 정식 고용일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해고가 비교적 유연하다. 이러한 상호 이익 구조는 비공식 노동(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유가 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거시경제적 특성 세 가지의 관점에서 먼저 분석하고, 브라질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과 지역별 불평등에 대해 분석·기술한다. 이는 브라질 당국의 현안인 비공식 경제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비공식 경제와 연계하여 이해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는 비공식 경제의 거시경제적 특성과 브라질의 불평등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모형적 토대 및 근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비공식 경제의 금융접근성 제한과 근로소득세 탈세가 표준적인 가계이질성(household heterogeneity) 거시경제모형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불평등과 빈곤의 뒷을 심화하는 것을 보인다. 전술한 2장에서의 브라질 경제 특성을 한 데 묶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형을 통한 실험을 통해 금융접근성 개선이 가져다주는 사회 전반적인 이점에 예측·소개하고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간략하게만 서술하자면 전체적인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고 공식 경제 내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의 공식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여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고 정부이전소득 증가로 빈곤층의 후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제4장에서는 앞의 세 가지 비공식 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정책 노력에 대해 연구·조사한다. 특히 브라질의 각종 정책들을 전술한 세 가지 거시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분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5장은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정리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특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비공식 경제 내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이용한 기업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브라질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브라질 정부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정책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브라질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전략이다.

## 제2장



#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2. 브라질 내 불평등



#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IMF의 정의에 따라 공식 부문과 비공식 경제 용어 설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먼저 경제 전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이라 하고 이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총합을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라 한다. 비공식 부문에도 공식 부문과 마찬가지로 기업 주체와 가계 주체가 있다. 1장에서 소개했듯이 기업의 비공식 정도(degree)는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과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식 기업의 비공식 노동자 고용은 내연적 확장에 해당한다.

브라질 내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특징은 △높은 강도의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금융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 △조세 및 비용 회피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공식 부문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수준, 소득 변동성 저하, 사회적 보호 부재 등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후생이 매우 낮은 결과로 이어지며 이러한 빈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며 저소득층 또는 비공식 종사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약으로 전통적 금융권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 디지털 은행, 대부업 등과 같은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비공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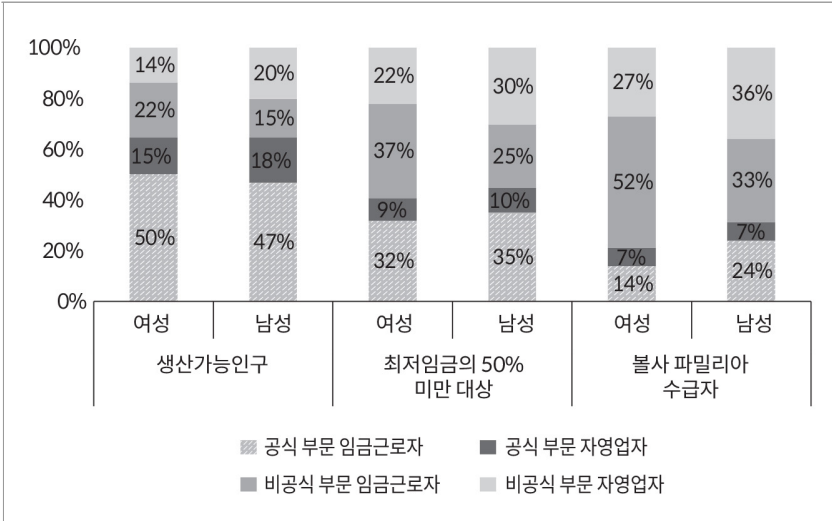
조세 또는 비용 회피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브라질 내 비공식 부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조세 등 각종 비용을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 가. 빈곤의 덫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근로자들은 대체로 빈곤에 대한 높은 취약성과 빈곤의 지속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Morgandi *et al.*(2022)에 따르면, 브라질의 빈곤층 자영업자(self-employed)의 대부분은 비공식 부문에 있고,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 Bolsa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수급하는 빈곤 자영업자 중 69~79%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급 빈곤 자영업자 중에서 개인 영세사업자(MEI: Microempendedor Individual)로 등록되어 있거나 법인 등록 번호(CNPJ: Cadastro Nacional da Pessoa Juridica)를 가지고 있는 공식 부문 자영업자는 5%에 불과하다.

비공식 부문에서 나타나는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낮은 소득 수준, 소득 변동성, 사회적 보호 부재 등은 이러한 빈곤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2-1]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 즉, 최저임금의 50% 이하 소득을 벌고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중 55%(남성), 59%(여성)가 비공식 부문 종사자로 나타나 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만을 비교할 경우 빈곤선 이하의 비공식 자영업자 비중은 30%(남성), 22%(여성)로 빈곤선 이하의 공식 자영업자 비중인 10%(남성), 9%(여성)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Bolsa 파밀리아 수급자 중 69%(남성), 79%(여성)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비공식 부문 자영업자는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의 생계형 자영업자로 볼 수 있다.

그림 2-1. 성별, 주요 요인별 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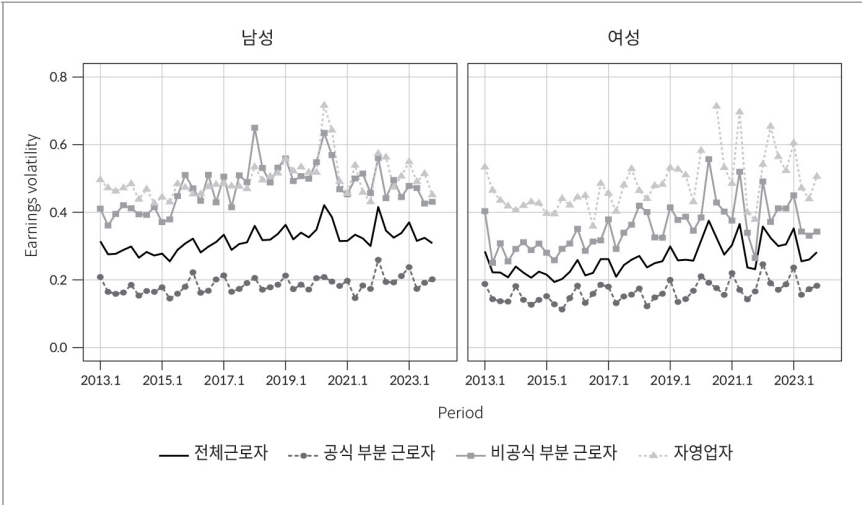


자료: Morgandi *et al.*(2022), p. 4.

낮은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비공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 변동성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sup>13)</sup> [그림 2-2]에 따르면 공식 근로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낮은 소득 변동성을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비공식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은 공식 근로자의 변동성을 상회하고 있는데, 2010년대 중반 브라질의 경기침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소득 변동성이 급증하였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가 비공식 임금 근로자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은 남성 자영업자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3) 변동성과 이동성은 별개의 개념이다. 비공식 부문은 본문에서 서술하듯이 역동적인 면이 크고, 경기 변동에 따른 임금충격이 공식 부문보다 크다. 이동성은 비공식 부문 내의 기업이나 소비자의 소득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다.

그림 2-2. 고용형태별 소득 변동성



자료: Portella *et al.*(2025), p. 25.

낮은 소득 수준과 소득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그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각종 시스템 안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의료 보장, 공적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득 감소 또는 소득 상실을 완충할 대체 수단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급작스러운 외부 충격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종사자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그림 1-2 참고).

전술한 낮은 임금, 높은 소득 변동성, 제도적 보호 부재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로 하여금 빈곤의 덫에 갇히도록 만들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상당히 크다. 이로 인해 취약한 개인 또는 가구를 더 깊은 빈곤 상태로 빠뜨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소득의 변동성이 클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지출만 하여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

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비공식 종사자의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과 관계가 큰데, 인적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종사자의 생산성 향상과 공식 부문으로의 이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종사 기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공식 종사자들의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 데이터를 이용한 Haanwinckel and Soares(2021)에 따르면 저숙련 비공식 종사자는 약 13개월 정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4)</sup> Bosch and Maloney (2010)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비공식 임금 근로자는 약 1년, 자영업자는 약 2년을 비공식 부문에 머무른다고 추정하였다.<sup>15)</sup> Romanello and Gonçalves(2017)은 비공식 종사자는 79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공식 부문에 남아있을 확률이 75%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up>16)</sup> 요컨대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비공식 근로 이후 공식 부문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다시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나. 금융접근성의 제한

비공식 종사자의 금융접근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는 구축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비공식 종사자들이 금융 접근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Gifford and Plano CDE(2022)에 따르면 브라질 내 영세 사업자의 83%가

---

14) Haanwinckel and Soares(2021), "Workforce composition, productivity, and labour regulations in a compensating differentials theory of inform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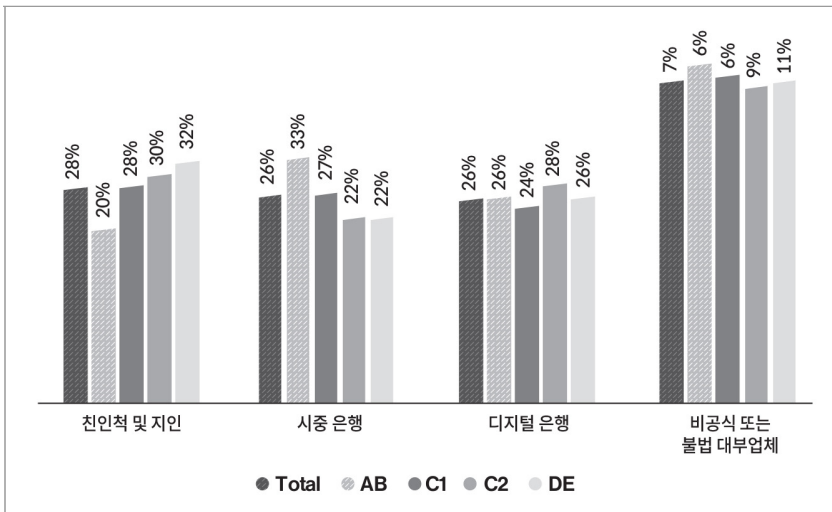
15) Bosch and Maloney(2010),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market dynamics using Markov processes: An application to informality."

16) Romanello and Oliveira-Gonçalves(2017), "The transition of brazilian workers to formality: evidences from duration analysis."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자영업자의 40%가 공식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만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며, 일반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보다 78%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저소득층 또는 비공식 종사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약으로 전통적 금융권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 디지털 은행, 대부업 등과 같은 다양한 비전통적 수단들이 고려되고 있다. [그림 2-3]에 따르면 낮은 신용 등급인 C1, C2, DE 계층에서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고려하는 비중이 신용 등급이 높은 AB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통적 금융권에서의 대출 고려는 낮고 비공식 또는 불법 대부업(loan sharks)에서 대출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비공식 또는 불법 대부업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림 2-3. 대출 고려 수단(지난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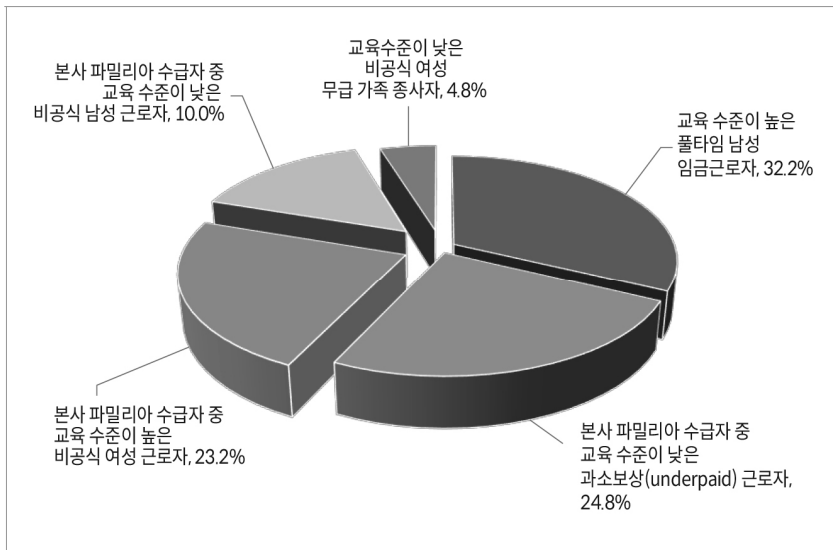


자료: Gifford and Plano CDE(2022), p. 28.

17) Gifford and Plano CDE(2022), "Financial inclusion in Brazil 2022."

신용 또는 대출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은 대부분이나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림 2-4]는 브라질 저소득층 데이터베이스인 Cadastro Único에 등록된 근로자의 구성을 보여준다. 동 그림에 따르면 등록된 저소득 근로자 중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이른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는 약 4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낮은 교육 수준 때문에 비공식 부문 종사자는 금융접근성에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 특성별 근로자 구분



자료: Morgandi *et al.*(2022), p. 8.

또한 Gifford and Plano CDE(2022)는 최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 즉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처음 금융시스템에 진입한 신규 금융 이용자들이 연체할 확률이 74% 더 높았다고 밝혔다. 신규 이용자들은 관련 제도와 대출 및 각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 근로자의 낮은 교육 수준은 금융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Santos, Mendes-Da-Silva, and Gonzalez(2017)은 브라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 지식이 낮을수록 비공식 대출, 즉, 지인이나 비공식 대부업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 문해력(literacy)이 낮은 사람은 비공식 대출을 이용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16.3%p 더 높았고, 저소득층 가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 문해력이 낮은 개인은 공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 즉각적인 유동성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비공식 종사자나 저소득층은 제도권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기업도 그 성격상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대출금리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Araujo and Rodrigues (2016)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식 기업의 금융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매출·이익·자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 기업에 비해 비공식 기업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집행의 불안정성 때문에 추심비용은 높고 회수확률은 낮게 평가한다. 또한 비공식 기업은 분쟁 시 법적 우선순위 확보가 불확실해 담보가치는 크게 할인되고,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은 비공식 기업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 비용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다. 노동고용 및 기업운영의 비용 절감

조세 회피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유일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주요 동기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Souza, Santos, and Melo(2024)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조세 회피를 이유로 비공식 상태를 유지하는 동기가 있음을 보여준

다.18) 동 연구는 브라질 북동부 바히아주(Bahia)의 소도시인 이타벨라(Itabela)에 거주하는 비공식 자영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왜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지 않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비용 감소를 비공식 상태를 지속하는 동기로 언급하고, 이는 조세 등 각종 비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응답자의 25%는 관리상의 편의를 비공식 상태를 유지하는 동기로 꼽으며, 비공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적용받는 규제와 요건이 적어 사업의 운영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요컨대 공식화에 대한 높은 비용, 특히, 조세 부담은 비공식 부문의 영세 자영자로 하여금 공식 부문으로의 이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동기일 수 있다.

Nascimento and Corcetti(2014)는 브라질 이스피투산투주 구아라파리(Guarapari) 시의 비공식 자영업자 198명을 대상으로 비공식 부문에 잔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19)</sup>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는 세무, 사업 허가 등의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44%는 사회보장제 등을 포함한 각종 조세 납부와 회계 관련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공식 부문에 남아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조세 및 각종 비용 회피는 비공식 부문 잔류의 주요 동기로 보인다.

비공식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기업도 비공식 상태에 머무르려는 동기로 조세회피가 지적되고 있다. Paula and Scheinkman(2010)은 브라질의 부가가치세 제도에 주목해 브라질의 비공식 기업이 비공식 상태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p>20)</sup> 브라질의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 방식(credit method)으로 운영되는데, 비공식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비공식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

18) Souza, Santos, and Melo(2024), "EMPREENDEDORISMO NO BRASIL: UM ESTUDO ACERCA DA INFORMALIDADE NO MUNICÍPIO DE ITABELA-BA, Revista."

19) Nascimento and Corcetti(2014), "As Principais Causas da Não Formalização das Empresas na Cidade de Guarapari/ES."

20) Paula and Scheinkman(2010), "Value-added taxes, chain effects, and informality."

에도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비공식 기업은 조세 회피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식 부문과의 거래망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다시 말해 공식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공식 기업과의 거래 유인이 발생하고, 반대로 비공식 기업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다른 비공식 기업과의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비공식성의 사슬(chains of informality)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Paula and Scheinkman(2010)은 이러한 구조를 브라질 내 4만 8,000개 이상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이용해 밝혀냈으며, 세율이 높고 비공식 거래를 용인하는 환경이 넓을수록 비공식성의 사슬이 강화됨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조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들은 비공식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비공식화는 거래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로 쉽게 전이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 기업이 비공식 부문에 계속해서 남도록 주요 동기가 조세 회피일 수 있으며, 기업 간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가 비공식성을 확장 또는 지속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BR, FGV, and ETCO(2008)도 조세 및 규제 회피를 브라질 비공식 부문의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sup>21)</sup> 특히 비용 및 조세에 대한 단순한 회피 이외에도 조세제도와 규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조세 회피 행위와 비공식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높은 세율, 비생산적인 행정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세제의 공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 조세 회피의 용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공식화에 영향을 미친다.

---

21) IBR, FGV, and ETCO(2008), "An estimate of shadow economy in Brazil."

## 2. 브라질 내 불평등

브라질은 전 세계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다. 선진국은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브라질은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누진적인 성격도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후에도 소득불평등이 높다. 브라질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불평등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침체를 겪는 시기에는 소득불평등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브라질은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서도 크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높고,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sup>22)</sup>

브라질은 지역별 소득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산업의 분포가 달라 경제를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남동부와 남부는 브라질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이고, 북동부와 북부는 인구가 희박하고 산업기반이 약해 소득이 낮은 지역이다.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불평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북동부가 소득불평등이 가장 높고, 북부, 남동부, 중서부, 남부 순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 브라질은 도시화율이 높아 인구의 약 88%가 대도시에 거주하는데, 도시 안에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공동체가 다수 분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농촌에 비해 도시의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

전술한 불평등은 주로 횡단면 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해당하며 정태적 특징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노동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비공식 경제 내 노동생산성이 매우 저하된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가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경

---

22) 앞서 언급한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더라도 최상위권의 부점유율(wealth share)이 높아지는 것이 국가 내 불평등의 동태적 특징이다.

제가 발전하면 비공식 부문이 축소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앞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sup>23)</sup> 3장에서도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비공식 경제의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가정할 때,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공식 부문의 자산 규모가 커지며 이자율이 하락하고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실질 임금 상승은 노동생산성이 모형 내에서 고정되어 있음에도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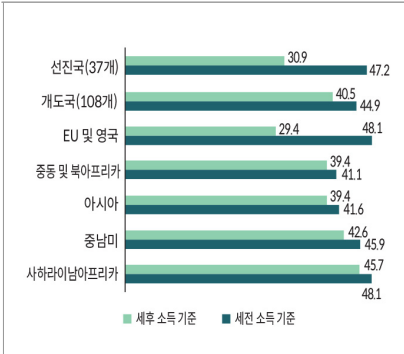
## 가. 소득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나라이다. 대륙별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해 측정할 때, 중남미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높다. 선진국은 소득세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불평등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기준으로 37개 선진국에서 세전 소득 기준으로 파악한 지니계수는 평균 47.2였으나, 세후의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는 30.9여서, 불평등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지니계수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45.9이고 세후 소득 기준으로는 42.6이어서, 소득세가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소득불평등이 조세 부과 전후에 여전히 높은 지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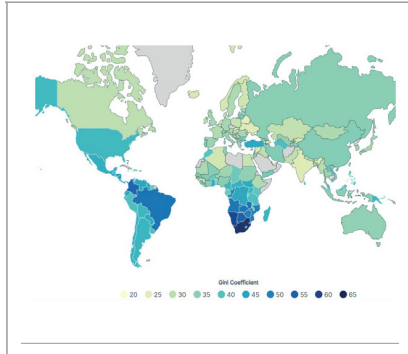
23) 코로나19 시기처럼 노동공급에 충격이 오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이다.

그림 2-5. 대륙별 지니계수(2021년 기준)



자료: Brugel, "Global and Regional Gini Coefficients of income inequality"(검색일: 2025.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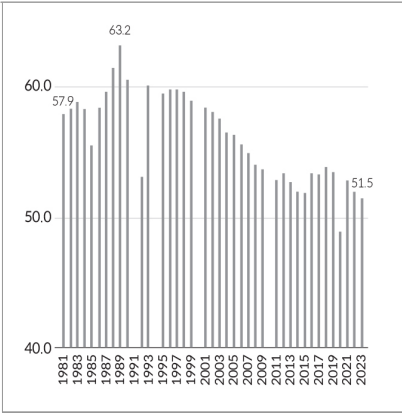
그림 2-6. 국가별 지니계수(2023년 기준)



자료: World Population Review, "Gini Coefficients by Country"(검색일: 2025.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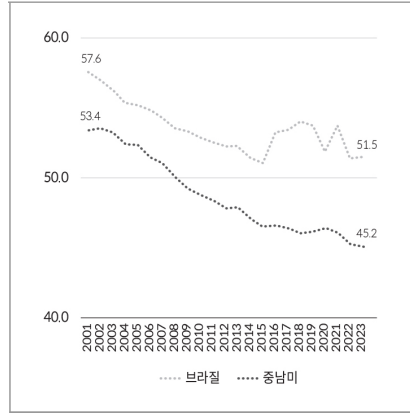
브라질은 중남미 대륙 안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이다. 2023년 기준으로 중남미의 지니계수 평균은 45.2인데, 콜롬비아는 53.9로 가장 높은 불평등을 기록하고, 브라질이 두 번째로 높은 51.6을 보여주었다. 브라질은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이지만, 다행히 1980년대 이후부터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63.2로 통계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는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졌고 2015년에는 51.1까지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2016~21년에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는 브라질이 경기침체를 겪었고, 202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제와 보건에서 위기를 겪은 시기이다. 브라질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원자재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브라질 경제가 수혜를 입으면서, 경제의 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도 다시 완화되고 있다.

그림 2-7. 브라질 연도별 지니계수 1



주: 일부 연도에서는 통계가 보고되지 않음.  
 자료: World Bank, "Gini index, Brazil"(검색일: 2025. 9. 1.).

그림 2-8. 브라질 연도별 지니계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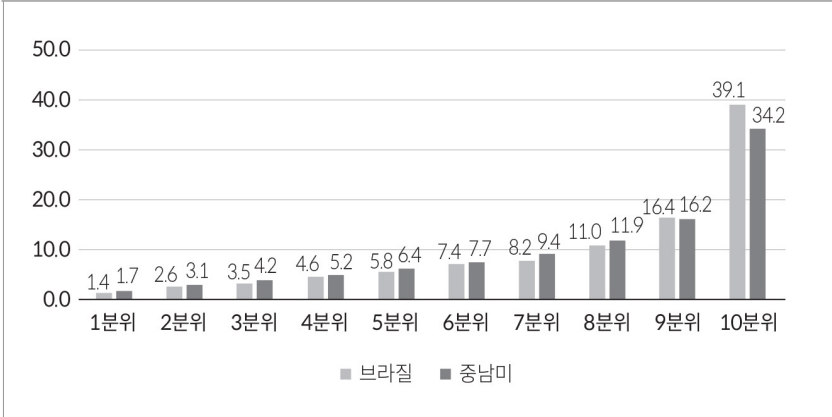


자료: Cepalstat, "Gini concentration index according to geographical area"(검색일: 2025. 9. 1.).

브라질 인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정렬했을 때, 소득이 낮은 10% 인구의 소득의 합은 브라질 전체 소득의 약 1.4%에 불과했다. 소득이 낮은 50%의 인구가 받은 소득을 집계하면, 전체 소득의 17.9%이고, 하위 70%의 소득의 합은 전체 소득의 33.4%였다. 브라질의 소득이 가장 높은 10%의 인구가 받은 소득이 전체 브라질 소득의 39.1%이며 이는 하위 70%의 소득의 합보다 높다.

그림 2-9. 브라질의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2024년)

(단위: %)



주: 가구의 일 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Cepalstat, "Share of personal income by per capita income deciles"(검색일: 2025. 9. 1.).

중남미 평균과 비교했을 때, 브라질에서 소득 하위 80%는 모든 분위에서 중남미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에, 소득 상위 20%는 중남미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중남미와 비교해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소득이 상위 20% 인구에게 집중된 정도가 높아 소득의 양극화도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소득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를 브라질 전체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때, 2017년에서 2023년 동안 브라질 전체 소득은 약 1.4% 증가했는데, 상위 0.1%의 소득은 이보다 5배나 높은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상위 0.1%가 얻는 소득이 2017년에는 브라질 전체 소득의 9.1%였다면, 2023년에는 12.5%로 늘었고, 상위 1% 인구의 소득은 2017년 브라질 전체 소득의 20.4%를 차지했다면, 2023년에는 24.3%로 증가했다.

24) Agencia Brasil(2025. 4. 9.), "Juros médios cobrados pelos bancos chegam a 43.7% ao ano em fevereiro"(검색일: 2025. 9. 25.).

표 2-1. 브라질의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 변화(2023년)

항목	브라질 전체	상위 1%	상위 0.1%
성인 인구	1억 6천만 명	160만 명	16만 명
월 평균 소득	3,400~3,900헤알 (643~737달러)	103,800헤알 (19,617달러)	516,000헤알 (97,520달러)
브라질 전체 소득에서 비중	2023년	100%	24.3%
	2017년	100%	20.4%
			12.5%
			9.1%

자료: Agencia Brasil(2025. 4. 9.)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지역별 소득불평등

브라질은 지역별로 경제와 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의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각 경제권역별로 기후, 인구, 산업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뿐 아니라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북부 지역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아마존 지역 개발을 위해 마나우스(Manaus) 시에 수출자유무역지대를 1960년대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마나우스에 일부 제조업이 있고, 농업, 광업이 주요 소득원이 된다. 2024년 북부 지역의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은 5개 권역 중 두 번째로 낮아 263.9달러였다. 북동부는 브라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건조한 열대기후의 지역으로 사탕수수, 열대과일, 관광 등이 주요 산업이다. 2024년 북동부의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은 권역 중에 가장 낮아 250.6 달러였다. 중서부는 초원 지역으로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위치한다. 목축과 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농업생산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니켈, 동, 구리 등을 채굴하는 광업도 위치한다. 중서부 지역의 2024년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은 442.9달러인데, 북동부에 비해 약 1.8배로 높은 수준이다. 브라질의 남동부는 기계, 전자, 자동차, 항공, 철강, 석

유화학 등 브라질의 주요 산업이 대부분 위치하는 산업의 중심지이다. 남동부 해안에는 석유가 생산되고, 브라질에서 광물 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된 지역이기도 하다. 기후도 온대기후로 온화하여 브라질 2억 1천만 인구 가운데 8,6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24년 남동부의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은 452.4 달러였다. 마지막으로 남부는 남동부와 마찬가지로 기계, 자동차, IT 등의 산업이 밀집하고 농업과 목축업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인구는 2,900만 명으로 남동부에 비해서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고, 브라질에서 도시화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다. 남부의 소득은 전체 권역 중 가장 높아, 2024년에는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이 474.8달러였는데, 이는 북동부의 1.9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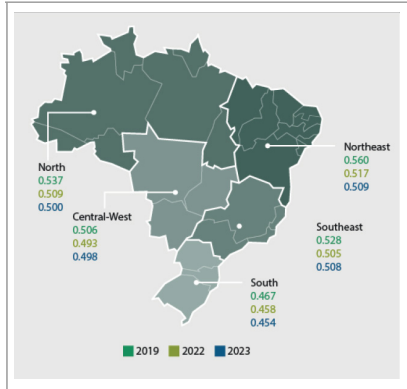
브라질을 5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북동부, 북부, 중서부, 남동부, 남부 수준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봤을 때는 소득이 낮은 순서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동부의 지니계수가 2023년 0.56인데 이는 전체 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소득이 낮은 북부 지역은 소득불평등도가 두 번째로 높았고, 2023년 지니계수는 0.54를 기록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남부 지역은 지니계수가 0.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서부 지역의 지니계수는 0.51, 남동부는 0.53이었다. 남동부와 남부는 소득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지니계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남동부가 남부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가 많고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부에 비해 소득 계층이 다양하고 저소득층의 비중도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월평균 일 인당 실질소득

권역	헤알	미국 달러
북부	1,389	263.9
북동부	1,319	250.6
중서부	2,331	442.9
남동부	2,381	452.4
남부	2,499	474.8
브라질 전체	2,020	383.8

주: 2025년 10월 30일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Per capita earnings hit record and inequalities fall to the lowest level since 2012"(검색일: 2025. 9. 1.).

그림 2-10. 권역별 지니계수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In 2023, wage bill and per capita household earnings hit record"(검색일: 2025. 9. 1.).

브라질의 소득불평등도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브라질의 도시화 정도가 높아, 전체 인구의 약 88%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이다.<sup>25)</sup> 브라질의 인구가 2억 1천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약 1억 8천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다. 경제권역별로 도시화율에도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높고 산업이 발달한 남동부 지역이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었고, 남부와 중서부 지역이 그다음 수준으로 도시화가 높으며, 소득이 낮고 산업이 약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이 도시화율이 가장 저조하다.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남동부에는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및 리우데자네이루가 위치하는데, 상파울루 지역에는 약 2,200만 명이 거주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는 1,300만 명이 거주한다. 도시 안에는 ‘파벨라(favela)’라고 불리는 빈민가가 다수 분포한다. 파벨라는 브라질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형성되었다. 브라질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전역에는 12,348개의 파벨라가

25) World Bank, "Urban population(% of population)"(검색일: 2025.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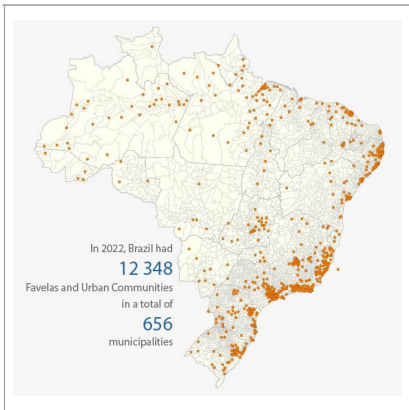
있고, 약 1,64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는 브라질 인구의 약 8.1%에 해당한다.<sup>26)</sup> 그리고 파벨라의 약 83.5%는 대도시 안에 위치하고, 파벨라 인구의 약 43%가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부에는 브라질 최대 인구의 대도시가 위치하기 때문에 파벨라 거주 인구도 많은 것이다. 파벨라는 빈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하수도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가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치안도 불안한 지역이다.

표 2-3. 권역별 빈민가(파벨라)(2022년)

권역	인구	비중
남동부	710만 명	43.3
북동부	460만 명	28.0
북부	330만 명	20.1
남부	97만 명	5.9
중서부	39만 명	2.4
전체	1,640만 명	100

자료: 브라질통계청(IBGE), "2022 Census: 16.4 million persons in Brazil lived in Favelas and Urban Communities"(검색일: 2025. 9. 1.).

그림 2-11. 빈민가(파벨라)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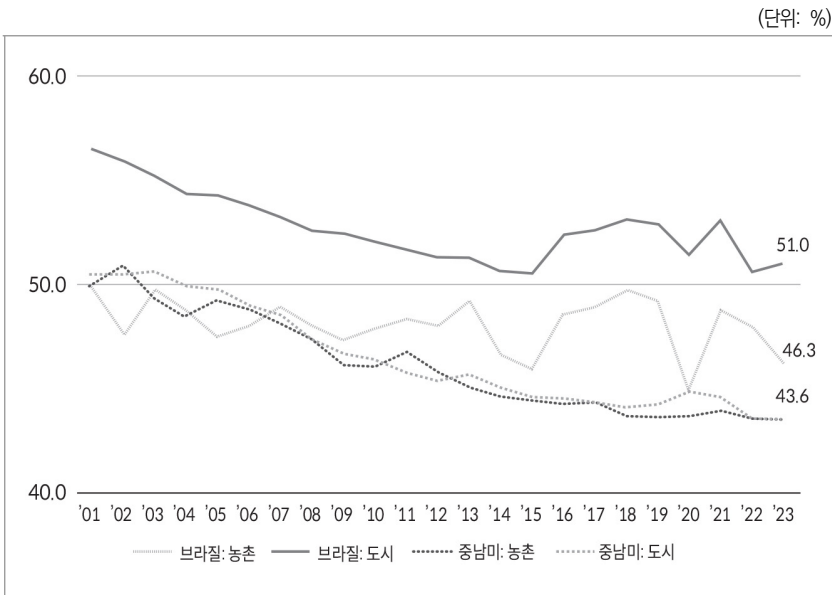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통계청(IBGE), "2022 Census: 16.4 million persons in Brazil lived in Favelas and Urban Communities"(검색일: 2025. 9. 1.).

대도시에 파벨라 거주자처럼 소득 최하위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동시에 소득 최상위 계층도 거주하기 때문에,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브라질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중남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남미에서 도시의 소득불평등도가 농촌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2023년에는 도시와 농촌의 지니계수가 각각 43.6과

26) 브라질통계청(IBGE), "2022 Census: 16.4 million persons in Brazil lived in Favelas and Urban Communities"(검색일: 2025. 9. 1.).

43.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브라질은 도시와 농촌에서 지니계수 차이가 커서, 2023년 농촌의 지니계수가 46.3인 데 반해 도시의 지니계수는 51.0으로 높았다.<sup>27)</sup>

그림 2-12. 브라질 도시와 농촌의 지니계수



자료: Cepalstat, "Gini concentration index according to geographical area"(검색일: 2025. 9. 1.).

27) Ibid.

## 제3장

K

PM

#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2. 주요 결과
3. 소결



본 장에서는 △금융접근성 제약과 △비공식 노동을 통한 비용 절감이 브라질의 불평등 및 이른바 ‘빈곤의 덫(poverty trap)’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앞서 2장에서 소득 및 지역별 불평등도를 정태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장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동태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의 초점이 가계(경제적)불평등에 있으므로 가계 이질성을 가정하고, 기본틀은 Aiyagari(1994) 모형을 따른다. 가계는 두 종류의 자산 중 하나에 저축 및 투자 결정을 내생적으로 한다. 하나는 낮은 수익률을 갖는 자산으로, 편의상 이자율을 0으로 가정한다. 다른 하나는 높은 수익률의 자산으로, 해당 자산의 이자율은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sup>28)</sup>

비공식 부문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 낮은 수익률 자산에 저축하는 가계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다. 반면, 높은 수익률 자산에 투자하는 가계는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율이 적용된다. 또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금융지식 축적 혹은 금융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금융접근비용(financial access cost)’이라 부르기로 한다.

모형에 비공식 부문을 도입한 결과, 불평등이 유의미하게 확대되고 대출제약에 직면한 가계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고수익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가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총저축이 감소하고, 그 결과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공식 부문의 이자율은 단일자산 Aiyagari 모형의 균형이자율보다 높게 형성되며, 높은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의 자산축적을 가속화한다. 반대로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빈곤층의 경제적 이동성을 더욱 제약한다.

이후 금융접근비용을 낮춘 균형과 벤치마크 균형을 비교한 결과, 금융접근

---

28) Kaplan and Violante(2014)에서는 비유동자산이 총생산에서 제외되고 유동자산만이 시장이자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계했다. 본고에서는 저수익자산이 총생산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시장 내 차이가 0의 균형을 맞추게끔 설정했다. 자연스럽게 총생산에는 공식 경제 내 자산과 노동만 투입된다.

비용이 소폭 감소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감소하고 총저축이 증가하며 균형이 자율은 벤치마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불평등 완화 효과로 직결된다.

요컨대 본 3장의 목표는 비공식 부문 특성이 강화된 경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된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화된 거시경제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특성이 불평등과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미치는 영향을 정략적으로 분석하였다.

##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가 다룬 비공식 경제의 핵심 특성은 세 가지이다. △빈곤층의 낮은 경제적 이동성, △금융접근성 제약, △비공식 노동계약의 비용절감 효과이다.

제3장에서 다룬 모형은 일반균형 모형으로, 기업과 가계가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특성을 가계 이질성으로 구현할지 기업 이질성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이 (1) 비공식 기업, (2) 비공식 노동자, (3) 공식 기업, (4) 공식 노동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모형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며, 기술적으로는 가계 또는 기업 중 한쪽만 이질성을 부여하는 것이 설계상 더욱 타당하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을 의미하지만, 가계가 동시에 기업가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낮은 기업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비공식 기업이 공식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낮은 생산성은 곧 낮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접근성이나 비용절감 효과 역시 가계와 기업 어느 측면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먼저 금융접근성을 살펴보면, 공식 금융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자산을 현금 형태로 보유하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예금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역시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공식 기업은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며 금리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대출 기반의 자본투자가 사실상 어렵다. 그 결과 기업이 개인의 저축을 이용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비공식 노동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 존재한다. 비공식 임금은 정부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기업 역시 연금·보험료 등 고용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노동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공식 노동고용은 가계와 기업의 이해가 일치하는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 브라질에서는 비공식 노동 비중이 매우 크며, 공식 기업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 신고하지 않는 비공식 고용 방식이 일반적이다.

본고는 가계 이질성(household heterogeneity)에 초점을 둔다. 이는 (1) 금융접근성 제약과 (2) 비공식 노동의 비용절감 효과를 효과적으로 모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특성인 빈곤층의 낮은 부의 이동성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 이질성(firm heterogeneity)은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의 평가 등 특정 연구에서는 유용하지만, 비공식·공식 부문 선택을 개인 차원에서 설명해야 하는 본 연구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Granda and Hamann(2015)에 따르면 공식 기업의 장점은 낮은 금리에 기반한 높은 금융접근성이고, 단점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고용비용이다. 모형에서는 충분한 저축을 보유한 기업가가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기업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연한 노동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개인 자산을 투입해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다. 결국 부유한 기업가가 비공식 기업을 운영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본고가 분석하고자 하는 일반적 현실과 괴리가 있다.

‘비공식 기업’에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일부 지하경제 활동도 포함될 수 있으나, 정책적·사회적 맥락에서 비공식 기업과 비공식 노동자는 대체로 저소득·빈곤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득층의 비공식 경제 참여는 부패와 연결되는 별도의 연구 주제로 중요할 수 있으나, 본고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모형에서 배제한다.

다음으로 비공식 경제의 저축이 저수익, 공식 경제의 저축이 고수익일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Fagereng *et al.*(2020)은 노르웨이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자산수익률이 매우 이질적이며, 이러한 이질성이 단순히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risk hedging)로는 잘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초적인 수준의 재무학(finance)에서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자산일수록 높은 수익률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부유층의 높은 자산수익률을 정태적·동태적 리스크 관리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위 연구는 자산 수준이 유사한 사람들 간에도 수익률 이질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그 요인으로 ‘금융지식(financial knowledge)’을 제시한다. 자산은 높은 시계열적 지속성(over-time persistence)을 갖기 때문에 금융지식의 차이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Lusardi, Michaud, and Mitchell(2017)도 금융지식이 자산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퇴 후 부의 불평등 중 30~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브라질의 금융접근비용은 물리적 거리나 단순접근비용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orld Bank 2004; Beck, Kumar *et al.* 2005). Kumar *et al.*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53%가 충분한 물리적 금융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의 몇몇 은행 서비스는 계좌가 없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층을 상대로 더 강화되며 신용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증빙과 계좌상태에 대한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

전술한 정보를 취합하여 본 장의 모형 내에서 금융접근비용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다. 금융접근비용을 총생산(output cost)의 형태로 설정한다. 이는 비유동자산 거래와 무관하므로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아니며, 공식 경제에서 높은 이자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기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비용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는 같은 자산을 가지더라도 금융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지만, 본 장에서 이용하는 모형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 지불 시 금융지식을 습득 및 갱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2.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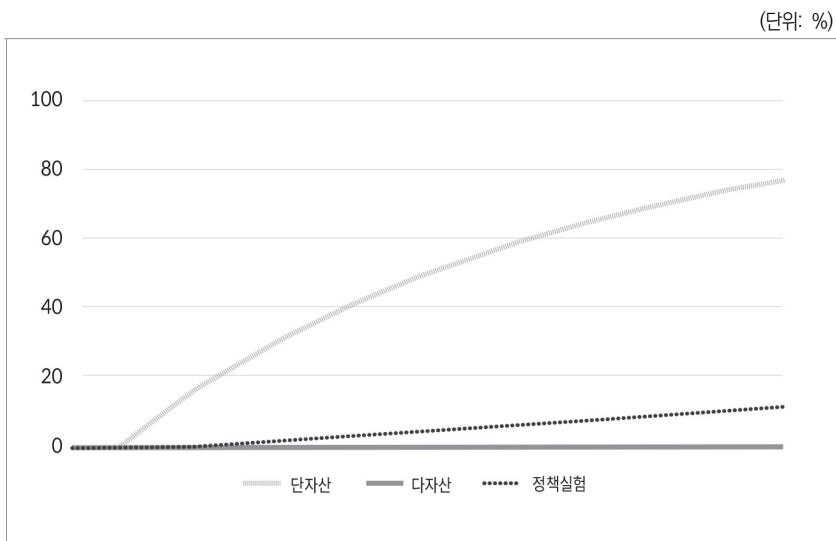
모형의 설계, 균형 계산,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부록에서 제시하고 여기서는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앞서 언급한 비공식 경제의 세 가지 특징 중 두 요소인 (1) 금융접근성 제약과 (2) 근로소득세 회피를 모형에 반영한 결과, 이러한 특징들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분석 과정에서 특히 빈곤층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운 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는 곧 금융접근성 제약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브라질의 부의 낮은 이동성(low wealth mobility)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다자산모형에서 부의 이동성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은 부의 이동성을 나타낸다. 천 개의 가계가 동일하

계 중위소득과 0의 자산으로 시작한 후 1만 년의 시간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 10%의 부를 획득하는 빈도수를 표시한 그림이다. 상위 10%의 자산을 한 번이라도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 자산의 하락과 관계없이 계수하기 때문에 정의상 비감소함수(non-decreasing function)이다. 단자산 모형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계가 상위 소득으로 진입하고 자산을 충분히 쌓을 시간이 주어지면 상위권의 부를 획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다자산모형은 초기조건이 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0의 자산으로 시작한 경우 상위 10%의 부를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동태적 부의 이동성



자료: 저자 작성.

다자산모형 내에서의 이러한 극단적인 부의 이동성 제한은 금융접근비용을 감소할 때 다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접근비용이 10% 감소할 때 0의 자산을 가진 가계가 매우 느리더라도 자산을 축적하고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동성 촉진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요소로 금융접근비용이 감소하며 고소득자가 높은 이자율과 함께 재산을 저축하기 용이해진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세수 확보 때문에 생기는 간접적 효과이다. 낮은 금융접근비용은 더 많은 가계가 공식 경제에서 활동하게 하고, 이는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에 기여한다. 모형 내에서는 세수가 0.146에서 0.176으로 20.55%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이러한 세수는 가계에 일시금 이전의 형태로 전달된다. 더 많아진 현금 이전은 모든 가계에 완충(buffer)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자산을 고수익에 투자할 유인입과 동시에 자산증식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부의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 및 소비 행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자산모형 내에서 빈곤층의 낮은 부의 이동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up>29)</sup>

먼저, 단자산모형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 이질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림 3-2]의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하위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이 약 0.8, 중위소득은 0.35, 상위소득은 0.02로 그 수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실질적으로 상위소득의 가계는 부유층처럼 저축/소비 활동을 하며 하위소득은 대출한계(borrowing limit)에 근접해 전형적인 hand-to-mouth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그에 비해 다자산모형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 이질성이 작다. [그림 3-2]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하위소득이며 빈곤층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91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중위소득 가계도 0.73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상위소득의 빈곤층 가계도 0.09로 유의미한 수준의 양수를 보인다.

다시 말해, 다자산모형에서는 모든 소득 수준에서 대출 한도에 근접한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빈곤의 덫'에서 각 가계가 벗어나기 힘든 구조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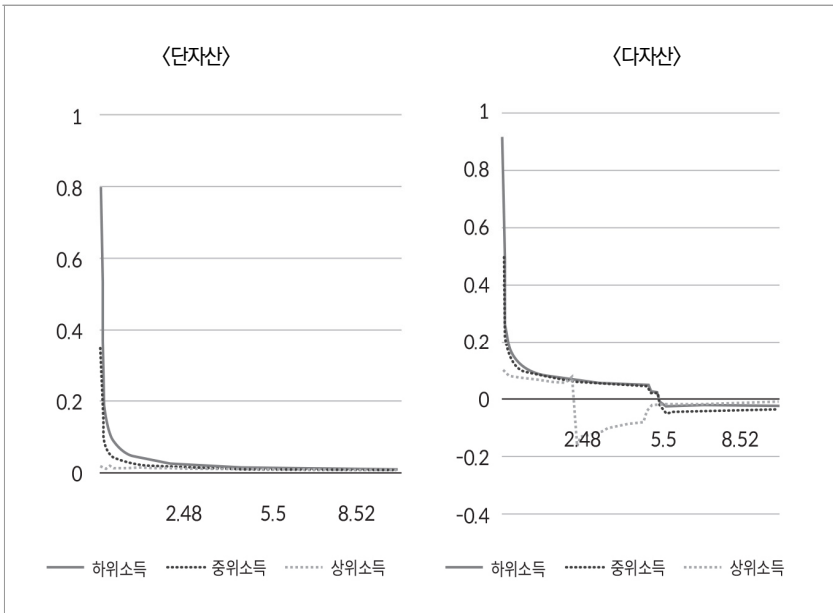
---

29) 다자산모형과 한계소비성향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aplan and Violante(2022) 참고.

또한, 단자산모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 축적이 되었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계소비성향이 0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자산모형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한계소비성향이 약 0.1의 큰 수치를 보인다.<sup>30)</sup> 단자산모형에서는 부의 축적과 함께 소비평준화(consumption smoothing)가 빠르게 가능해지는 반면 다자산모형에서는 자산을 추가로 축적하여 소비평탄화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내구재(non-durable consumption)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림 3-2. 자산에 따른 소비자 한계소비성향

(단위: 실수)



자료: 저자 작성.

30) 0.1이라는 높은 수준의 한계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0에 가까운 이자수익률의 결과물이다. 미래를 일정 수치만큼 할인하지만 저축의 수익률은 0이다.

마지막으로 다자산모형 내에서 상위소득의 가계는 일정구간 한계소비성향이 유의미한 음수이기도 한데 이는 고소득자에 한해서 빠르게 부를 축적해 상류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반영되어 있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성(persistence)이 매우 높은 편임으로 고소득자의 높은 임금은 보장되는 편이고, 부를 축적해나감에 따라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안정적으로 고수익 자산을 저축하고 더 많은 부를 쌓아나가하고자 한다.

### 3. 소결

1) 금융접근성 제한과 2) 근로소득세 회피가 부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거시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제시했다. 기존의 거시경제학 양적모형(quantitative macroeconomics model)에서 많이 쓰이는 모수들과 브라질의 부와 관련된 목표치를 이용해 다자산모형을 조정하여 다자산모형과의 차이점을 구분했으며 더 나아가 금융접근비용을 낮추는 정책실험을 진행했다. 다자산모형은 균형에서 횡단면(cross-sectional) 부의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심화하며 총생산에 투입되는 자산의 양을 낮춤으로써 경제 내 높은 이자율로 이어진다.<sup>31)</sup>

본 장에서 다룬 모형은 정태적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동태적 부(wealth)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도 제공한다. 다자산모형에서 낮은 부의 수준을 가진 가계는 고소득이어도 상류층으로 편입되기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낮은 부의 이동성의 원인으로는 빈곤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에 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출한도(borrowing limit)에 다다르지 않은 가계도 저축을 포기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비내구재 소비를 보인다. 이는 꾸준한 저축을 통한 상류층 편

---

31) 브라질의 기준금리(selic)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입에 대한 유인보다 당장의 소비활동을 통한 효용 증가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형의 함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먼저, 현금 이전 정책의 대상계층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시금 지원이 대부분 비내구재 소비로 이어진다. 이는 총생산을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는 효과로는 이어질 수 있으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접근비용 감소의 효과에 대해 제시할 때 언급했듯이 전반적인 일시금 이전액의 증가는 모든 가계에게 완충역할을 하며 가계가 부를 축적해나가는 데에 기여한다. 공식 경제로의 편입도가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며 일시금 이전액 증가로 이어지면 다시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브라질에서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이전 정책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대상자의 교육 관련 정책과 연동되어 지급된다.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는 타당하다.

둘째, 상대적 빈곤층이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수시장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빈곤층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크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이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동적이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제4장

K

#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브라질은 비공식 부문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비공식 부문 비중을 축소한 성과를 거둔 국가이기도 하다. 브라질이 시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빈곤 및 불평등 완화, 공식화의 장점 확산 및 공식화의 장벽 완화 등에, 개인적으로 비공식 경제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그리고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장려와 같은 공식화 촉진에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공식화 유인 및 지원, △사회보장 및 포용, △경제개발 및 고용촉진, △제도 집행 및 벌칙, △비공식의 근본 원인 해결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본 보고서가 주목한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식화와 세수, △노동자 직업 교육과 공식화 및 생산성 향상 등 4대 이슈와 연결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와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은 기업 및 개인의 공식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보장 및 포용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중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PETI)’과 ‘불사 패밀리(PBF)’는 대체적으로 부의 이동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브라질은 비공식 부문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과 자영업(개인)을 위한 미소금융(소액대출)으로 대표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초소·중소기업과 자영업(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공식 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셋째, 브라질의 공식화 성과는 재정 여력과 사회보장 범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는 소득세, 급여세 등을 통한 총세입 증가와 사회지출 부담 완화 등으로 인해 재정 여력 확장과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일련의 직업훈련 및 교육 과

정을 통해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공식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왔다. 선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반영해 발전을 거듭 중인 정책적 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나, 최근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기술교육 고용접근프로그램(PRONATEC)’은 평생 학습과 성인 교육이 고용, 웰빙, 포용성을 촉진하는 행동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확산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실업자 고용 가능성 증가, 임금 개선, 생산성 향상,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브라질 정부는 비공식 경제가 갖는 개인, 기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화,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회적으로는 빈곤 및 불평등 완화, 공식화의 장점 확산 및 공식화의 장벽 완화 등에, 개인에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그리고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장려와 같은 공식화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목표나 수단으로 종합하면 △공식화 유인 및 지원, △사회보장 및 포용, △경제개발 및 고용촉진, △제도 집행 및 별치, △비공식의 근본 원인 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은 단독 또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영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자영업(개인)을 위한 주요 공식화 유인 및 지원 방안으로는 공식화 인센티브, 공식화 비용 절감, 등록 간소화, 소상공인 프로그램,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촉진 정책, 금융 및 수출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개인)이 공식 부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체의 공식화 및 정규직 고용 자격 취득과 관련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이다. 또한 소규모 및 초소규모 기업의 공식화 절차 간소화와 등록 및 납세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영업(개인)이 사업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식 경제 참

여를 장려했다. 중소기업진흥청(SEBRAE)의 지원,<sup>32)</sup> 중소기업 규제 간소화 및 표준 일반법 및 보완법(Simples Federal Law 9.317/1996 및 Lei Complementar 123/2006) 제정,<sup>33)</sup> 개인 소상공인(MEI)을 위한 보완법(Lei Complementar Micro Empreendedor Individual 128/2008) 제정,<sup>34)</sup> 공공조달 참여 촉진 정책,<sup>35)</sup> 금융지원 정책, 수출 지원 등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개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식화 방안들이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초에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다양한 조치들은 경제성장, 소득 분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범위한 정책 틀 안에서 시행되었으므로 브라질의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공식화 추세는 단일 정책, 계획 중심의 미시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 및 포용 정책으로서 사회보장 적용 범위 확대, 현금 이전 및 사회적 지원, 실업보험, 사회·연대 경제 이니셔티브<sup>36)</sup>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빈

32) SEBRAE(Serviço Brasileiro de Apoio às Micro e Pequenas Empresas)는 1972년 설립(1990년 민간 비영리 단체로 전환)되어 공식 부문의 임금에서 징수한 급여세의 일부를 사회보장기구(INSS)로부터 사회적 기여금(0.6%, 기업 공제)으로 받아 중소기업 진흥(창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시장 접근, 교육 및 자문 등을 지원) 및 규제 프레임 구축(설계 및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한다.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Form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FORLAC)/ILO(2014), "Policies for the formal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Brazil," p. 5.

33) Simples Federal(Nacional)로 지칭되는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5대 연방 조세와 사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하나로 통합함. 이 제도는 기업들이 기존에는 경제활동에 따라 다른 연방,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월별 제출하던 조세 및 사회보장 신고서를 대체하여 단일의 간소화된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방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추가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를 면제하며, 기타 납세의무를 경감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식화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평가에 따라 보완법이 제정됨. *Ibid.*, p. 6.

34)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법률인데, 면세 등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소기업의 공식화는 물론 소기업 노동자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Ibid.*, pp. 8-10.

35) △Lei Complementar 123/2006(특정 금액 이하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독점, 절차 간소화, 대규모 계약 하청 허용 등), △법령 Decree 6.204/2007(연방 공공조달 차원의 중소기업 간소화 및 차별적 대우), △교육부의 전국학식프로그램(PNAE: Programa Nacional de Alimentação Escolar), △전국식료품구매프로그램(PAA: Programa Nacional de Aquisição de Alimentos), △2013년 브라질 컨페더레이션컵, 2014년 FIFA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에 적용된 특별 공공조달프로그램(Regime Diferenciado de Contratações Públicas, RDCP, Law 12.462 및 Decree 7.581/2011), △ESG 특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공공조달프로그램(Programa de Compras Sustentáveis) 등이 공공조달 측면에서 중소기업 및 생산자의 공식화 프로그램으로 이용됨. *Ibid.*, pp. 11-12.

36) 2000년에 개시된 '사회적 경제' 촉진 정책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상호 협회 및 다양한 비영리 기관

근층의 부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더 많이 포함되도록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의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간 및 부문 간 계획(PETI)과 'Bolsa Famili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실업보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공식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공동체에 기초한 협동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연대 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셋째, 경제개발 및 고용(재고용) 촉진 방안으로는 인프라 투자, 소득 분배 정책, 중소기업 지원(MSE), 노동시장 정책 등을 실험했다. 토목 건설과 같은 인프라 사업 투자를 통해 정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반적으로 비공식 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소득 분배 개선 정책으로 비공식 경제에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시도했다. 비공식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공식화 촉진, 생산성 향상, 규제 강화, 자금조달 기회 제공 등을, 비공식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노동시장 기능 개선을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각각 모색했다.

넷째, 효과적인 근로 감독과 불이행 처벌을 통해 비공식 경제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공식 경제의 노동법 준수 보장과 불이행 해결에 필수적인 근로 감독 제도를 강화하고, 탈세 및 기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비공식 경제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경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원인에

---

을 통한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하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평가됨. 지방 차원에서 3년간의 다양한 시범 사업 이후 2003년부터 사회·연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무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특별 사무국(SENAES: Secretaria Nacional da Economia Solidária)을 설립하고, 금융지원, 기술지원 및 훈련(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제고), 사회·연대 경제 특별법 제정, 공공 데이터 구축 및 공개 등에 노력했음. *Ibid.*, pp. 13-14.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 세제, 노동 규제, 사회보장 등의 개선 전략을 채택하고, 비공식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통해 공식화를 더욱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여성, 노인, 청년층, 저학력자 등 비공식 경제의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시도된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 가운데 본 보고서의 관심 이슈와 관련 있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비공식 경제에 포함되는 계층을 포함한 일반적인 탈빈곤 및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대책 일자리 정책이나 근로능력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정책이 이용된다. 탈 빈곤 및 빈곤 완화 정책의 긍정적인 결과는 부(사회)의 이동성 개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 브라질은 기업 및 개인의 공식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보장 및 포용 정책을 시행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브라질에서 실시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아동 노동 근절 프로그램(PETI)’과 ‘불사 패밀리아(PBF: Programa Bolsa Família)’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부의 이동성 향상에서는 PBF가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불평등과 빈곤 수준 감축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집권기(1995~2003)에 다양하게 시작되어, 2003년 취임한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조건부 현금 이전(CCT)’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PBF는 △소득 이전, △권리 접근, △다른 정책과의 연계라는 세 가지 핵심 축<sup>37)</sup>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2001. 4.] Bolsa 에스콜라(Bolsa Escola) 프로그램(법률 10.219/2001)
  - 빈곤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
- [2001. 7.] Cadastro Único(행정명령 3.877/2001)
  -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경제적 정보를 수집하는 연방정부 통합등록시스템으로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데 이용(2년마다 자격 갱신)
- [2003. 6.] 국가식량접근프로그램(PNAA, 법률 10.689/2003)
  - (기아 퇴치와 식량 안보 및 영양 증진) 취약계층이 매일 충분하고 질 좋은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식량 불안정 상태인 가족에 현금 지원
  - 전임 프로그램(Programa Bolsa-Renda, 법률 10.458/2002)의 수혜자 흡수
- [2003. 10.] PBF(법률 10.836/2003) 출범
  - Bolsa Escola, PNAA, Bolsa Alimentação, Auxílio Gás\* 통합
  - \* 가스 보조금 제도로써 2025년 9월 신규 무상 가스 지원 정책(국민 가스, Gás do Povo)으로 변경: 현금 보조 → 실물 보조
- [2011. 6.] 국민 없는 브라질(Brasil sem Miséria, 행정명령 7.492/2011)
  -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통합과 조율을 통한 국민 극복 계획
- [2020. 4.-2021. 3.] 긴급 보조금 I, II, III(Auxílio Emergencia I -법률 13.982/2000, Auxílio Emergencia II-긴급조치 1.000/2000, Auxílio Emergencia III-행정명령 10661/ 2021)
  - 코로나19 팬데믹 긴급 지원
- [2021. 8.] 브라질 보조금(Auxílio Brasil, 긴급조치 1.061/2021)으로 개정
  - 보우소나루 정부가 BFP를 대체하여 시행했으나 2023년 룰라 정부에서 환원
  - [2021. 10.] BFP 18년 운영 최종 지급
  - [2021. 11.] AB 기준 발표
  - [2021. 12.] 특별 혜택(BEx, 법률 14.342/2022): AB 수혜 가정 최저 금액(400헤알) 영구 보장
  - [2022. 7.] 혜택 보완(AB+, 개헌 123): 2022년 말까지 최저 금액 인상(400헤알→600헤알)
- [2023. 3.] 신규 PBF(임시 조치 1164/23): 4대 조치
  - 가족당 600헤알 + 추가 150헤알(7세 미만 아동) + 추가 50헤알(18세 미만 아동, 임신부, 수유기 여성)

자료: Silva *et al.*(2023), p.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소득 이전: 매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은 신속한 빈곤 완화를 위해 연방금융기관(Caixa economica Federal)으로부터 직접 현금 수당을 수령한다. △권리 접근: 가족이 현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PBF의 조건은 자녀의 교육, 보건 및 사회 지원과 관련이 있다. 이 측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와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여 빈곤의 악순환 단절을 목표로 두고 있어 중요성이 높다. △다른 정책과의 연계: PBF는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취약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사회 보호 조치들과 조율된다.

2021년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PBF는 ‘브라질 보조금(AB: Auxílio Brasil)’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이 확대되면서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가계 수가 급증(2021년 말 1,450만 가구 → 2022년 10월 2,100만 가구)하면서 소요예산(2019년 GDP 대비 0.5% → 2020년 4.0% → 2022년 1.2%)이 늘어나 재정적으로 다른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AB와 각종 팬데믹 지원책이 혼합되면서 현금 이전의 잠재적 효과성이 의문시되며,<sup>38)</sup> 통합등록시스템(CadU) 품질 저하, 조건 모니터링 환류 지연, 위기 및 충격 대응 역량 저하, 신기술 혁신 및 활용(모바일 앱 활용 등) 저조, 신속 처리(zero waiting list) 과제 등 사회보장체제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2023년 룰라 정부는 CCC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는데, BFP 재설계 및 ‘통합사회보장체제-단일사회보장등록부 긴급 지원강화 프로그램(PROCAD-SUAS)’, 개헌(PEC da Transição, 32/22)을 통한 2023년 재정지출 한도 증액(1,450억 헤알), 법률 제정(law 14.578/2023)을 통한 ‘사회개발 및 기아 퇴치부(MDS)’에 배정한 사회보장 특별예산(714.4억 헤알) 편성, 균형재정에 입각한 공공부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재정정책(Novo Arcabouço Fiscal, PLP 93/2023), 소비세제 개혁(PEC 45/2019) 등을 바탕으로 한 신규 PBF로 환원했다.<sup>39)</sup> 신규 PBF는 △가구 규모 및 구성원에 따른 현금이전으로의 부분적 회귀, △신규 혜택 도입(유년기 수당 BPI 및 가변 가족 수당 BVF),<sup>40)</sup> △신규 ‘보호 규정’ 및 ‘복귀 보장’<sup>41)</sup> 등을 기초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

PBF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보우

38) 2022년 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인당 평균 588헤알을, 4인 가구는 1인당 평균 151헤알을, 6인 가구는 1인당 106헤알을 수령했는데, 이는 통합등록부(CadU: Cadastro Unico)에 1인 가족 등록을 장려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2020년 2/4분기와 3/4분기에 큰 폭으로 1인 가구 등록이 증가했음.

39) Silva *et al.*(2023), pp. 10-14.

40) △유년기 수당: 지원 대상(생후 7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빈곤 가정) 및 금액(1인당 월 150헤알), △가변 가족 수당: 지원 대상(7~18세 미성년자, 임신부, 수유 여성이 있는 빈곤 가정) 및 금액(1인당 월 50헤알).

41) 룰라 정부 PBF의 신규 규칙은 소득이 증가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탈퇴 충격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소나루 정부에 의해 정책 개혁이 시도된 2021년은 PBF가 시행된 지 18년이 되는 해였는데, 세계은행, 진보단체 및 학계 등을 비롯한 주류 단체들은 PBF를 극찬하였고 당시까지 전 세계적으로 19,80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극심한 빈곤의 감소와 아동 사망률 감소에서 여학생의 학교 등록 증가, GDP 상승 효과(1.78)에 이르는 일련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적절한 참여 공간의 부족, 빈곤 가계의 과도한 부채(indebtedness) 위험, 또는 교육, 주거 및 기초 위생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의 사회지출 감소 기여 위험을 지녔다는 점, 성평등 관점의 비판으로서 여성의 도구화 및 여성의 추가 부담에 기초한 조건부 현금 보조라는 점, 그리고 가구 구성원당 평균소득(178헤알) 이하인 가정에 초점을 맞춘 표적 정책이기 때문에 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 등에서 단점과 문제를 보였다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특히 다수의 비공식 노동자의 경우 단지 소득이 PBF 기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소득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PBF 수혜 자격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 간과된 점이 지적되었다.<sup>42)</sup>

##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비공식 경제에 속한 초소·중소기업과 자영업(개인)의 공식화를 위한 주요 수단 가운데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역할은 중요하다. 기업은 저리의 정책금융을 이용한 대출이, 자영업(개인)은 저리의 미소금융을 이용한 소액대출이 공식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다. 브라질에서도 기업과 자영업(개인)을 위한 유사 금융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 대응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었고,<sup>43)</sup>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지

42) WIEGO(2021), "Social Protection for Informal Workers: Trends and Changes," p. 1.

43) 1970년대 초에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국내기업이 설립하고 보스턴 소재 미소금융 기구인

원하는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은 2003년 중반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즉, 룰라 정부에서 실시된 △기본금융계좌(conta simplificada) 개설, △연방 법률(Lei n° 10.735/2003) 및 국가통화위원회(CMN) 결의안(Resolução n° 3.109/2003),<sup>44)</sup> △생산지향형 소액대출 프로그램(PNMPO: Programa Nacional de Microcrédito Produtivo Orientado), △소액대출 확장 프로그램(Crescer Program, 2012년), △소규모 가족농 금융지원 프로그램(PRONAF: Programa Nacional de Fortalecimento da Agricultura Familiar )<sup>45)</sup> 등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먼저 은행들에게 기존의 당좌예금 계좌보다 요건이 완화된 ‘기본 금융 계좌(conta simplificada)’의 개설 및 제공을 의무화했다. 저소득층 인구의 상당수가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거나 정식 고용 계약(등록)이 없어 발생하는 소득 증빙 어려움,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당좌예금 유지 수수료 부과, △증빙 어려움, △은행

---

Accion International이 지원하는 정부기구(NGO)인 União Nordestina de Assistência a Pequenas Organizações(UNO)에 의해 미소금융(소액대출)이 시작됨. 초기에는 기부에 의존하다가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1980년대 외채위기로 인해 1991년 운영이 중단됨. 1970~90년대에 Banco da Mulher (Women’s World Bank 소속, 1982년), 파라나(Paraná) 주의 Banco do Microcrédito(1986년),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의 CEAPE/RS Center(1987년, 국내 확산), 세아라(Ceara) 주의 Pro-Renda(1990년),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Portosol(1996년),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VivaCred(1996년), 최빈 지역인 북동부에 초점을 둔 국영은행(Banco do Nordeste)의 CrediAmigo Program(1998년) 등 다수의 NGO와 국영은행에 의한 미소금융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에다가 규제 공백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영되었음. 브라질 정부가 미소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및 규제적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공동체연대위원회(Comunidade Solidária)’를 설립한 1995년이었음. 위원회는 △유아 사망률 감축, △생계형 식품 제공, △문해력 및 기초 교육, △주거 및 위생, △가족농, △소득 창출 및 전문 자격 등 6대 사회 프로그램 영역을 구분했는데,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규제는 ‘소득 창출 및 전문 자격’ 영역 아래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음. 미소금융 사업을 포함해 민간 비영리기구(NPO)에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은 정부 기구와 동반 관계를 구축해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OSCIP)’ 설립(1999년)으로, 소기업에 미소금융을 제공할 또 다른 정책은 기업신용협회(SCM)라는 신규 금융기관 설립으로 이어졌음. Nayak and da Silva(2019), “Evolution and Effects of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n Microfinance in Brazil,” pp. 164-165.

44) 재원 마련과 미소금융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결의안은 Resolução n° 3.422/2006 과 Resolução n° 3.706/2009로 대체됨.

45) 농민이 신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식 부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해야 함.

거래 이력 또는 소득 부족에 따른 대출난 등을 이유로 은행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제한 조치<sup>46)</sup>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빙이나 주소 증명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시행 2년 만인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의 계좌 수는 600만 개로 매월 평균 11만 개가 증가하고, 고객 수는 10%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47)</sup>

‘연방 법률(Lei n° 10.735/2003)’은 초소기업과 저소득층 개인<sup>48)</sup>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를 규정했는데, 상업은행, 상업용 포트폴리오를 갖춘 유니버설 은행(신용조합 제외), 그리고 연방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이 △초소기업과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대출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소액대출 업무를 목적으로 요구불 예금의 2%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중앙은행의 무이자 계좌에 보관하며, △소액대출 업무를 직접 혹은 ‘민간 비영리기구(NPO)’ 및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Organização da Sociedade Civil de Interesse Público)’<sup>49)</sup>와 같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PNMPO는 미소금융기관(SCMEPP, OSCIP), 신탁, 개발 기관,

- 
- 46) 사기 및 자금 세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잔액은 항상 1,000헤알을 초과할 수 없고, 계좌 소유자가 소액대출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에 한해 한도가 부여된 금액만큼 증가함. 또한 계좌는 개인 및 1인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고, 수표 발행은 금지되며, 자금은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서만 인출해야 함. 전체 금융기관에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의 동시 유지는 금지되고, 계좌 개설 및 유지 수수료 부과는 금지됨. 계좌와 연계된 무료 거래 및 서비스 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허용됨.
- 47) 그러나 저소득층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CEF(Caixa Econômica Federal)와 Banco do Brasil에서 개설된 간편 계좌는 전자 카드를 통해 은행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이미 받는[브라질 납세자 식별 번호(CPF)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Bittencourt, Magalhães e Abramovay(2005), “Informação de crédito: um meio para ampliar o acesso dos mais pobres ao sistema financeiro,” pp. 226-227.
- 48) ‘법률(Lei n° 10.735/2003)’은 소액대출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거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출 수혜자로 정의하고, CMN 결의안은 “소규모 전문, 상업 또는 산업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자연인, 그리고 현행 법률에 따라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을 수혜자로 정의했음.
- 49) 법률(Lei n° 9.790, de 23 de março de 1999)에 설립 근거를 둔 OSCIP는 법인적 없는 비영리 민간 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부여하는 특별한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데, 법률 용어가 아닌 NGO와는 차별화됨. 이 자격은 해당 단체가 정부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 복지, 문화, 환경, 인권 등의 공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과정에서 투명한 회계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됨. SEBRAE(2025), “Entenda o que são OSCIPs e como elas funcionam”(검색일: 2025. 11. 5.).

협동조합은행 등 생산지향형 소액대출 기관(IMPO)으로 지정된 기관들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사업장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발은행(BNDES)과 협동조합은행은 자금 중개 역할만 담당한다. PNMPO는 법률(Lei n° 11.110/2005), 시행령(Decreto 5.528/2004), CMN 결의안(Resolução n° 3.310/2005) 및 Codefat 결의안(Resolução n° 446/2005) 등을 근거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법률(Lei n° 10.735/2003)이 규정한 요구불 예금의 2%와 노동자 지원 기금(FAT: Fundo de Amparo ao Trabalhador)을 이용하고, 고용 및 소득 창출 목적을 감안해 노동부(MTE)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NIMPO 설립으로 정부정책으로서 미소금융(소액대출)의 정의가 확립되었고, 브라질 미소금융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주요 개발은행인 BNDES가 운영하는 ‘미소금융 프로그램(BNDES Microcrédito)’은 OSCIP를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개자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소액대출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2005~16년 사이에 총사업금액(포트폴리오)이 10억 헤알(2.7억 달러)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sup>50)</sup>

‘소액대출 확장 프로그램(Programa Crescer)’은 BNDES 등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기존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공공 부문 금융기관들도 미소금융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12년에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연간 5억 헤알(1억 3,350만 달러)로 제한된 경제 보조금을 최상위 생산지향적 소액대출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기관은 연매출 12만 헤알(32,000달러) 미만인 최종 대출자인 소상공인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한다. PNMPO의 특징들을 개선시킨 Crescer Program의 최대 성과는 소액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춘 것인데, 연 60%에서 8%로 인하한 데 이어 최초 대출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소

---

50) Nayak and de Silva(2019), “Evolution and Effects of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n Microfinance in Brazil,” p. 166.

액대출 거래의 금융거래세(IOF)는 면제되었는데, 브라질 재정위기로 인해 이 프로그램의 보조금은 2014년에 폐지되었다.<sup>51)</sup>

미소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제도적 변화는 법률(Lei n° 13.636/2018)에 근거하여 연매출 20만 헤알(53,400달러)로 수혜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범위가 확장되고, FAT와 요구불 예금 이외에 정부의 일반 예산과 헌법에 규정된 지역 기금이 신규 자금 조달원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액대출 전달 체계도 기술적 발전을 감안해 사업장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기술 금융서비스 기업인 Fintech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52)</sup>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소액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잠재력 구축, 미소금융(소액대출) 규제프레임 개발 및 개선, 민간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업무의 개발 촉진 등이 금융 포용성 제고와 소액대출 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 법률(Lei n° 10.735/2003)’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 까지 소액대출 신청은 매우 더디게 진행하여 포트폴리오 잔액이 2억 헤알을 넘지 못했으나 2004년 6월부터 신청이 급증하여 2005년 3월에는 10억 헤알, 2005년 4월부터는 10억~11억 헤알 사이로 전체 가용자금(14억 헤알)의 78% 수준인 안정세를 유지했다.<sup>53)</sup> PNMPO를 통한 미소금융 대출액은 2005~14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2억 헤알(14억 달러)을 기록했다. 재정위기로 인해 2017년 말에는 37억 헤알(10억 달러)로 감소되었지만, 최빈 지역인 북동부지역이 미소금융 고객의 84%와 대출건수의 75%를 차지하여 비공식 경제 대응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동부지역은 미소금융 고객의 13%와 대출건수의 1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여성 취학 기간이 남성보다 평균 1년 이상 늘어나고 여성이 경제주

51) CÂMARA DOS DEPUTADOS(2012), “LEI N° 12.666, DE 14 DE JUNHO DE 2012.”

52) CÂMARA DOS DEPUTADOS(2018), “LEI N° 13.636, DE 20 DE MARÇO DE 2018.”

53) Bittencourt, Magalhães e Abramovay(2005), “Informação de crédito: um meio para ampliar o acesso dos mais pobres ao sistema financeiro,” pp. 231-232.

체인 가계 수가 증가하면서 개인 및 가계 구성원의 미소금융 이용도가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의 미소금융 이용도가 고객 수와 대출건수에서 각각 1% 미만으로 나타나 브라질 미소금융 서비스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업에 브라질 비공식 사업의 33%가 집중되어 있지만, 단지 9%에 불과한 서비스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서비스 부문이 브라질 노동력의 약 40%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볼 때, 높은 미소금융 이용률을 고용창출과 관련시키면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금융 수단 이외에도 브라질은 산업(고용)정책을 통해서도 비공식 부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룰라 1~2기 정부(2003~10년)에서 시행된 산업정책의 후속 조치로서 브라질 산업의 국내생산 및 기술 구조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확대를 목표로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1기 정부(2011~14년) 시기인 2011년 8월에 시행된 ‘위대한 브라질 계획(PBM: Plano Brasil Maior)’이 그것이다.<sup>55)</sup> PBM을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와 연계시킬 경우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금융접근성 개선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PBM의 주요 목적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중소기업의 공식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PBM은 비공식 경제 감축보다는 공식 고용창출 기회를 만들거나 비공식 근

54) Nayak and de Silva(2019), “Evolution and Effects of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n Microfinance in Brazil,” pp. 167-168.

55) PBM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 촉진,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이니셔티브 조율을 위한 일련의 부문별 조치 시행 구상과 수평적(체계적) 정책 및 수직적(부문별)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지침에는 새로운 기술 및 사업 역량 개발과 국내 생산망 강화 및 통합 조치가 포함되었고, 생산 공정 및 가치사슬 구성에 따라 ‘블록’으로 구성된 19개 부문을 경제적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PBM은 프로그램 조정 및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ABDD)의 권한 부여 및 의사결정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계획된 산출물과 결과의 효과 부족으로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2014년 12월 종료되었다. Mindreau(2025), “The relaunching of industrial policy in Brazil: What have rare earths got to do with it?” pp. 4-5; Schapiro(2014), “Ativismo estatal e industrialismo defensivo: Instrumentos e capacidades na política industrial brasileira,” p. 49.

로자를 위한 소득여건 개선으로 비공식 부문에 간접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정책적 성과는 부진한 편이다. 즉, PBM은 노동 감독,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 기업 공식화를 위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확산으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핀테크와 함께 중앙집중화된 디지털 결제 제도가 디지털 포용성과 금융 이해력 제고를 통해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확산기인 2020년 11월 중앙은행이 가동한 ‘디지털 지불 제도(Pix)<sup>56)</sup>가 사용상의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공식 및 비공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Pix 사용자 수는 개인(1억 6,000만 명)과 법인(기업,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1억 7,547만 명을 기록하고 성인 인구의 93%가 Pix를 주된 결제 수단(62%)으로 사용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브라질 금융거래(P2P, P2B, B2B, P2G, B2G)의 47%가 Pix를 통해 이루어졌다.<sup>57)</sup> 중앙은행은 Pix가 사용자(개인, 기업, 정부)의 편의성 제고 이외에 금융비용 축소, 보안 제고, 소매시장 디지털화, 시장 경쟁 및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성, 대중이 이용 가능한 소매 결제 수단의 겹 채우기 등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sup>58)</sup> 그러나 계량적 방법론으로 Pix의 확산이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제

56) 중앙은행이 개발한 Pix는 gig 노동자와 농부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24시간 무료(개인 무료, 법인 및 상인 0.33%)로 즉시 결제(IP 및 계좌(요구불, 저축, 선불 결제 계좌)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한 실시간 제도인데, 수수료 측면에서는 현금카드(1.13%) 및 신용카드(2.34%)와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함. IMF(2023), “Brazil: Selected Issues,” p. 53, p. 56을 부분 참고.

57) Ribeiro(2025), “Pix bate recorde e registra quase 280 milhões de transações em um dia”; Scognamiglio(2025), “Pix cresce enquanto uso de dinheiro físico encolhe no Brasil, aponta estudo do Googl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0. 27.).

58) 중앙은행은 Pix의 장점으로 지불자 측면에서는 속도, 보안, 저렴한 수수료, 민첩성(모바일 전화 연락처 목록이나 QR 코드를 사용한 결제 개시), 편의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POS 기기 없이 모바일 폰으로만 결제) 및 기타 스마트폰 기능과의 연계를, 수취인 측면에서는 저비용(카드 수취 수수료), 자금의 즉시 이용성(신용 수요 감소), 간편한 자동화 및 결제 조정 및 용이한 계산(pos 기기 및 계산원 불필요)을, 그리고 IP 생태계 측면에서는 지불수단 전자화(돈세탁/테러 자금 관리 개선, 유통 화폐 축소), 소매 결제 경쟁 제고(서비스 질적 제고 및 비용 저하), 핀테크 및 빅테크를 위한 개방적 환경, 높은 금융 포용성 잠재력 및 보안을 강조하고 있음. Banco Central do Brazil(2025), “Brazilian Payments System: Pix”(검색일: 2025. 11. 6.).

고를 통한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축소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x는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에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거래의 공식화와 소기업과 노동자의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59)</sup> 반면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비해 Pix 금융거래의 편의성, 접근성, 속도, 저비용 등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Pix가 기존의 비공식 경제의 단순한 디지털 리브랜딩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sup>60)</sup>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금융서비스의 배제는 단순히 접근성 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신, 관료주의,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다수의 브라질 국민들은 비싼 계좌 유지 수수료와 계좌 개설에 까다로운 서류 요건으로 인해 전적으로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은행 지점 방문이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어려웠던 농촌은 물론 도시의 저소득층은 계(rotating credit groups), 현금 보관, 물물교환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이용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Pix는 단순히 속도나 비용보다는 스마트폰, 개별 납세번호(CPF), 노점상의 디지털 방식 결제 등 금융거래 설계의 혁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개인 및 기업)의 수는 급증하고, 민간 부문 대출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공적 금융기관의 전체 국내여신 공급 규모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또한 Pix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브라질은 저렴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에 허덕이는 초소·중소기업과 자영업(개인)이 비공식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61)</sup>

59) Global Finance(2025), "Pix becomes Brazils top transaction method"(검색일: 2025. 11. 6.).

60) Araujo(2025), "Pix and Progress: Democratizing Financial Services"(검색일: 2025. 10. 27.).

61)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Form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FORLAC)/ILO(2014), "Policies for the formal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Brazil," p. 13.

###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에서 비공식 고용을 축소할 가장 성공한 사례이다. 사회보장, 기업 및 경제 발전, 기술 및 혁신 지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동 감독제도 등이 결합되어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은 브라질의 재정 확장과 사회보장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면, 2009~20년 동안 공식 고용은 23.1% 증가하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하는 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에 500만 명 이상 증가했다.<sup>62)</sup> 이 가운데 재정 여력의 확장은 세수 확보 및 증대와 연결되는바, 비공식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소득세 증가(법인, 개인) 등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 있는 Simples Federal(Nacional), MEI 보완 조치, 초소·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금융접근성 제고 이외에 ‘전국 기업 등록 및 합법화 간소화 네트워크(REDESIM: Rede Nacional para a Simplificação do Registro e da Legalização de Empresas e Negócios)’<sup>63)</sup> E-social,<sup>64)</sup> 수출정책,<sup>65)</sup> 혁신 및 기술이전<sup>66)</sup> 등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MEI와 Simples Federal(Nacional)은 공식화의 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공적 연금, 의료 시스템, 그리고 금융시스템 접근성 제고와 같은 공식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sup>67)</sup> 특히 비공식 부문 자영업 노동자 및 초소기업가 감소

62) ILO(2022), “Social Protection in Action: Brazil Country Brief,” p. 1.

63) 기업 및 사업체의 등록, 법률 준수, 변경 및 폐업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을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업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포털(gov.br/redesim)을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

64) 노동 감독과 지급 의무의 간소화 및 원활화를 목표로 2013년 개시된 통합정보수집시스템임. 연방정부의 정보 전달의 품질 향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시도함.

65) 초소·중소기업의 발전 및 공식화를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소규모 수출(5만 달러 이하)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절차(DSE: Despacho Simplificado de Exportação)를 적용함.

66) 혁신적이면서 기술 기반의 초소·중소기업 설립 및 육성에 이용된 PBM(2011년)과 ‘기업 인큐베이터를 위한 국가지원프로그램(PNI: Programa Nacional de Apoio às Incubadoras de Empresas)’이 대표적임.

67) ILO(2022), “Social Protection in Action: Brazil Country Brief,” p. 3.

와 2~3인 고용 사업자(MEI)의 수 증가는 비공식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 전환을 시사하고, 이러한 성과는 전술한 재정 여력 확장과 사회보장의 확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ILO(2022)는 Simple Federal에 등록된 초소기업(MEI)의 수와 총세입 추세를 통해 상호 양(+)의 관계가 있고,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이 국가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68)</sup> 한편, 기업에 있어 비공식 노동자의 고용은 조세, 퇴직금 및 기타 비용 회피를 통해 경영상의 압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노동의 비공식화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조세 징수와 사회적 이전 목표를 저해하여 재정 문제를 악화시킨다. 게다가 노동의 비공식화는 소규모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부 외 고용’을 고려할 경우 대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브라질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이 약 10%의 비공식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노동자의 숙련도나 교육 수준과는 무관하게 폭넓게 이용되는 비공식 고용은 대기업의 계산된 원가 절감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9)</sup>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은 정부의 엄격한 노동 감독과 더불어 기업과 노동자를 합법적인 체제로 유인하는 것인바, 그 체제 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납세를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노동 감독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비공식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원 공식화를 강제하는 동시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노동 감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엄격한 노동 감독 체제는 공식 고용 증대에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성장이나 혁신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 감독으로 인한 고용의 공식화가 기업의 성장 및 혁신과 상충한다는 것은 사회 모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브라질 당국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급여세가 임금의 68~97%에 달해 노동자의 공식화 비용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68) *Ibid.*, p. 4.

69) IDB(2025), “Tackling Informality in Brazil: The Hidden Costs of Labor Inspections”(검색일: 2025. 10. 22.).

하고 노동자의 공식화는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비공식 경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 요소는 △더욱 악화될 미래 취업 전망(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층), △낮으면서 변동성이 높은 소득, △취약한 노동환경, △저생산성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 부족 등에 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하고 취약한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 및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반듯이 뒷받침되어야만 비공식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공식화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라질은 비공식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를 기업과 함께 공식화하는 방안 이외에 비공식 노동자의 기술 향상을 통한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안은 직업훈련이다. 비공식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기존 비공식 노동자의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하거나, 중등 교육 졸업생의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학업과 직장을 연결하거나, 학력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지원 혹은 개인(자영업) 비공식 노동자의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하는 방식 등이 있다. 브라질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시행해 오고 있다.<sup>70)</sup>

먼저 ‘국가직업교육계획(PLANFOR: Plano Nacional de Formação Profissional)’은 공식 및 비공식 부문 노동자, 실업자, 영세 농민,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 위험한 사회적 환경에 처한 청소년, 여성 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

---

70) 성인 실업자 대상의 ‘직업재교육프로그램(Programa de Reciclagem Profissional, 1994년)’.

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통한 공식화 및 고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된 공공정책이었다. 노동부가 1995년에 수립한 이 프로그램은 1996~2002년까지 실시되었는데, 노동자지원기금(FAT: Fundo de Amparo ao Trabalhador) 재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20%를 대상으로 평균 100시간에 걸친 단기 속성훈련과정을 통해 공식 및 비공식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공식화 및 고용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으로 이 프로그램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전체 훈련생 수는 연간 경제활동인구의 5%를 넘지 못했다. 또한 훈련 집단에 한하여 실업률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노동시장 정보 부족에 따른 기획 및 관리역량 약화, 교육생 수 감소 등으로 정치적 지지를 상실하면서 2003년에 ‘국가직업자격계획(PNQ: Plano Nacional de Qualificação)’으로 대체되었다.<sup>71)</sup> PNQ는 PLANFOR의 거버넌스 구조와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의 초단기 기술교육 과정도 포함했다. 교육 대상은 저소득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 장기 실업자,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브라질 원주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40세 이상 노동자, 농촌 노동자, 가족형 농부 및 기타 가사 노동자, 자영업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협동조합이나 협회 소속 노동자,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으로 PLANFOR보다 더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까지 PNQ의 무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실업자와 구직자에게만 제공되었기에 비공식 부문 노동자와 실업보험 수령이 중단된 장기 실업자는 무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사회개발부(MDS)와의 협력으로 ‘볼사 파밀리아’ 수혜자들에게도 직업교육 과정 정보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로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계층의 대상 인구에게까지 교육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NQ 프로그램은 교육 등록에 필요한 선행 요건

---

71) Gonzalez(2010), “EMPLOYMENT POLICIES IN BRAZIL: HISTORY, SCOPE AND LIMITATIONS,” pp. 77-78.

을 이전처럼 그대로 유지하여 노동시장과 정규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았던 저학력 및 저기술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여<sup>72)</sup>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공식화와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공식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 및 재훈련이라는 점과 공식화 및 고용 개선 가능성을 계획한 정책이었던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PLANFOR와 PNQ는 포용성 향상, 빈곤 감소,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과 잘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73)</sup>

직업교육의 다음 발전단계는 저소득층·농촌지역·청년층 대상(비공식 부문 포함)의 단기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인 ‘국가기술교육 고용접근프로그램(PRONATEC: Programa Nacional de Acesso ao Ensino Técnico e Emprego)’으로서 법률(Lei nº 12.513/2011)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교육부), 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단위의 학습 서비스 기관, 국공립 및 사립 대학 등과도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공교육 체계와도 연계하여 초단기 및 중기 기술과정을 통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 기회 제공에도 목적을 두었다. 또한 PRONATEC 법률은 연방 및 주의 직업학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원격 학습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 과정 수를 늘리는 국가적 목표를 공식화했다. 비록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PRONATEC의 영향과 PRONATEC의 비용 효율성 및 전달체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sup>74)</sup> 평생 학습과 성인 교육이 고용, 웰빙, 포용성을 촉진하는 행동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실업자 고용 가능성 증가, 임금 개선, 생산성 향상, 공식 고용으

72) OECD(2018), “Getting Skills Right: Brazil,” pp. 79-80.

73) *Ibid.*, p. 81.

74) Almeida, Amaral, and de Felicio(2016), “Assessing Advances and Challenges in Technical Education in Brazil,” pp. 42-44.

로의 전환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75)</sup>

한편,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만으로는 비공식 노동자의 공식화나 생산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 절차 간소화나 재정적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을 병행한 사례도 있다. 비공식 경제와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공식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노동자보호프로그램(PPT: Programa de Proteção ao Trabalho)’이 이에 해당한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자치단체인 마리카(Maricá)에서 시행된 PPT는 자영업자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역내 주민(개인 창업자 MEI 등록 및 자영업자 협동조합 가입)을 포함한 비공식 노동자의 공식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혜택을 제공했다. ‘생산촉진혜택(BEP)’은 PPT 수혜자의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50%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Cota 10 혜택’은 공식 은행계좌 접근성이 제한된 수혜자에게 저축계좌를 제공하여 수혜자의 노동활동으로 발생한 신고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사회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는 출생, 질병, 최소 50% 소득 감소, 경제활동 관련 신용 담보 제공 등의 특정 조건에서만 저축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PPT는 2023년 4월 본격 시행되었지만 2025년 1월에 중단되었는데, 비록 브라질에서 비공식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을 통한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공식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PPT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공식화를 목적으로 시도된 최초의 노동자보호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MEI 등록 시행은 비공식 자영업(개인)을 공식 경제로 유인하여 사회보장 및 기타 보호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최초의 디지털 지역화폐(Mumbuca) 이용은 연대경제 및 금융 포용성 등의 개념이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PPT는 브라질 비공식 경제를 위한 노동정책으로 승화될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5) OECD(2018), “Getting Skills Right: Brazil,” pp. 77-78.

## 제5장

K

#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브라질은 품질을 우선시하는 고소득층과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소비하지만, 가격만이 제품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주류 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날 경우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부 구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시기에는 가계 소비가 위축된다. 또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결제 시스템인 PIX 사용이 늘어나면서 금융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온라인 구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공식 경제에 대한 기업전략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2장에서 다룬 것처럼 비공식 경제는 빈곤·저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공식 경제 내 가계의 소비/소득의 특성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예를 들어 그들의 시장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금융포용성과 가치소비가 주된 전략이며, 추가로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브라질에서 이른바 프리미엄 시장의 특성과 관련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브라질은 소득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에 따라 소비자 군을 분류하고 각 소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득계층 분류는 브라질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하는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A 계층부터 가장 낮은 E 계층까지 5개 층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대표적 컨설팅 업체인 Tendências Consultoria는 통계청(IBGE)의 소득통계를 바탕으로 가구를 월 소득에 따라 A~E 계층으로 분류한다.

표 5-1.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브라질의 소득 계층 분류(2024년)

소득 계층		가구 월 소득		인구
		헤알	달러	
고소득층	A 계층	25,200 이상	4,700 이상	900만(4.3%)
중산층	B 계층	8,100~25,200	1,500~4,600	3,120만(14.8%)
	C 계층	3,400~8,100	630~1,500	6,540만(31.0%)
저소득층	D, E 계층	3,400 이하	630 이하	1억 500만(50.0%)

주: 월소득은 헤알화 기준으로 발표되며, 2024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함.  
자료: Tendências Consultoria(2024), p. 4.

A 계층은 고소득층, B와 C는 중산층, D와 E는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A 계층은 가구의 월 소득이 약 4,540달러 이상인 가구로, 인구는 약 90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한다. B 계층은 중산층 중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월 소득은 1,460달러에서 4,540달러 사이에 있다. B 계층은 약 3,120만 명으로 브라질 인구의 약 14.8%를 차지한다. 소비의 측면에서 A와 B는 유사한 성향을 갖는데, 제품의 선택에서 품질이나 브랜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며, 경험에 기반한 소비를 하는 성향이 있다. C 계층은 중산층 중에서 상대적으로

로 소득이 낮은 가구로, 월 소득이 610달러에서 1,460달러 사이의 가구이다. 브라질에서 C 계층은 약 6,5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0%를 차지한다. C 계층 소비자는 중산층으로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D와 E 계층은 저소득층 가구로, 월 가구 소득은 610달러 이하이다. D와 E 계층 인구는 약 1억 500만 명으로 브라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계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필품 위주의 소비를 하며,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결정에 있어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에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고소득의 A와 B 계층의 약 4,000만 명이고,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인 D와 E 계층이 약 1억 500만 명이기에 때문에, 소득과 소비성향이 다른 두 개의 거대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같은 제품군이어도 계층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품질과 가격으로 나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이다. 브라질은 전 국민에 대해 무상의료(SUS)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은 무상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서비스 품질이 높지 않고 진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비싼 사립 병원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립 병원은 제품의 질과 효험을 우선시하므로 고가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구매한다. 미용과 성형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특히, 브라질은 국내에 의료기기와 의약품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브라질은 제조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통 과정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단위의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품이 브라질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보건기관인 ANVISA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기준이 엄격하고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또한 제품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고품질의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브라질에서 유통될 때, 생산국에 비해 가격이 2~3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도, 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브라질 저소득층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가격 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sup>76)</sup> 우선 이들은 가구 소득이 월 약 610달러 이하로 낮고,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계획적인 소비를 하기 어렵다. 소득이 낮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생필품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되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를 저축하여 미래에 소비하기보다,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격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브라질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소비하지만,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주류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저소득층은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호한다. Barki(201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제품 구매에서 저렴한 가격이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7~8%나 높은 중소형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다.<sup>77)</sup> 대형마트는 저렴한 가격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중소형 마트는 고객 개인에게 친절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저소득층이 갖는 심리적 ‘결핍’을 보상해주었으며, 매장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적용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존중받는 느낌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형마트나 빈민가의 소규모 가게

---

76) Barki(2014), "Consumer Behavior of the Base of the Pyramid Market in Brazil"; Edgard Barki와 면담 내용에 기반.

77) Barki(2014), "Consumer Behavior of the Base of the Pyramid Market in Brazil," p. 16.

는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워 저소득층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빈곤함을 상  
기시킨 데 반해, 중소형 마트는 존중받는 서비스와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적 결핍을 채워주었다.

둘째, 저소득층의 구매에서는 방문판매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의 비중이 크  
다.<sup>78)</sup> 브라질 저소득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에서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인적 네트워크의 도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저  
소득층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들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불신과 지역사회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으로 인해, 방문판매나 개별화된 서비스를 선호한다.

셋째, 주류 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호한다.<sup>79)</sup> 이  
들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나 세제와 같이 가격이 비교적 낮은  
상품군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가격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제품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인데, 저소득층도  
자신의 소득 내에서 이 제품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함으로써 자  
신들도 주류 사회와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다는 자존감을 느끼게 된다.

브라질에서 노동자당이 집권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최저임금을  
크게 늘려 왔는데,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할 경우 저축을 하기보다 소비를 늘리  
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가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브라  
질에서는 2003~16년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노동자당이 집권하  
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Bolsa Familia와 같  
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Bolsa Familia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  
금지원정책으로, 가정에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가 이들을 학  
교에 보내거나 예방접종과 같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가구에 현금을 지  
원한다. 2025년 9월 현재 가구 구성원의 평균 일 인당 월소득이 218헤알(약 40

---

78) *Ibid.*, p. 18.

79) *Ibid.*, pp. 20-21.

달러) 이하이면 Bolsa Famili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구당 600헤알(약 120달러)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한다. 자녀가 0~7세인 경우에는 아동 한 명당 150헤알(약 30달러)을, 임산부 및 7~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일 인당 50헤알(약 10달러)을 별도로 지급한다. 브라질 저소득 E 계층의 가구 소득이 월 61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Bolsa Familia로 연계 되는 지원금이 가구 소득의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지원금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브라질 정부는 BPD-LOAS나 다른 종류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Bolsa Familia에 비해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계층을 지원한다.

표 5-2. Bolsa Familia 지원금(2025년 기준)

항목		금액
기본 지원금	가구당 월 지원금	가구당 600헤알(약 120달러)
추가 지원금	0~7세 아동	일 인당 150헤알(약 30달러)
	7~18세 아동 및 청소년	일 인당 50헤알(약 10달러)
	임산부 수당	일 인당 50헤알(약 10달러)

자료: 브라질 정부, "Receber o Bolsa Familia"(검색일: 2025. 9. 20.).

표 5-3. 브라질 정부의 저소득가구 지원프로그램 수혜 여부와 일 인당 월평균 소득(2023년)

(단위: 헤알, 달러)

프로그램	수혜 여부	가구의 일 인당 월평균 소득	
		헤알	달러
Bolsa Familia	수혜	635	121
	비수혜	2,227	423
BPC-LOAS	수혜	1,068	203
	비수혜	1,885	358
기타 프로그램	수혜	826	157
	비수혜	1,867	355

자료: 브라질 통계청(IBGE).

노동자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진다. 현 대통령인 룰라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최저임금을 4차례 인상하였다. 룰라 대통령의 전임자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우파정부 4년간 최저임금이 약 27% 인상된 데 반해, 룰라 정부는 집권 불과 2년 만에 약 25% 인상되었다. 높아진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승을 의미한다.

표 5-4.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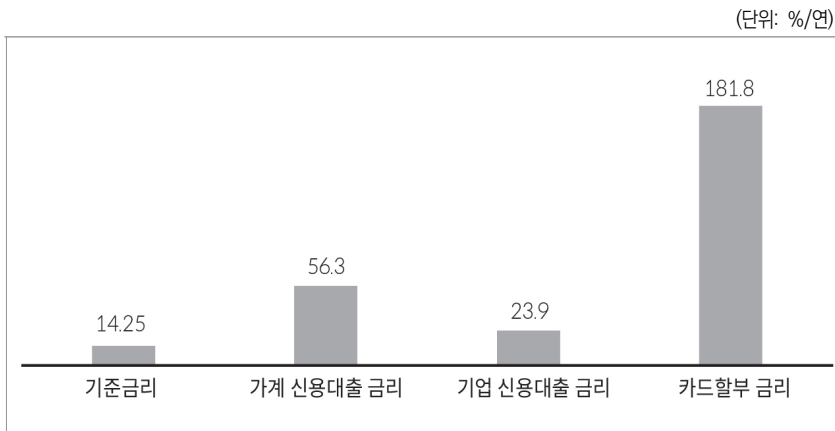
대통령(성향)	시기	최저임금(헤알)	이전 기 대비 인상률
테메르(우파정당)	2018. 1.	954	1.8%
보우소나루(우파정당)	2019. 1.	998	4.6%
	2020. 2.	1,045	4.7%
	2021. 1.	1,100	5.3%
	2022. 1.	1,212	10.2%
룰라(노동자당)	2023. 1.	1,302	7.4%
	2023. 5.	1,320	1.3%
	2024. 1.	1,412	7.0%
	2025. 1.	1,518	7.5%

자료: Contabeis, "Salário Mínimo de 1994 a 2025"(검색일: 2025. 9. 25.).

금융 측면에서 브라질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할부 구매에 의한 소비가 일반적이다. 할부 구매는 몇 개월 또는 수십 개월에 걸쳐 제품의 구매 비용을 분할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소비여력이 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 할부 구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E 계층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D 이상의 소득 계층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브라질 중앙은행은 PIX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보급하였는데, 현재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PIX를 이용하고 있고, 2025년 9월부터는 신용카드

가 없는 경우에도 PIX를 통해 할부 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sup>80)</sup>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할부 구매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자율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5월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4.25%였는데, 이 시기 가계가 이용하는 신용대출의 연평균 금리는 56.3%이고, 카드 할부 구매의 연간 이자율은 181.8%였다.<sup>81)</sup> 할부금융이 널리 이용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으면 가계소비는 위축된다.

그림 5-1. 브라질 기준금리와 연간 대출금리 예시(2025년 5월 기준)



자료: Agencia Brasil(2025. 4. 9.), “Juros médios cobrados pelos bancos chegam a 43,7% ao ano em fevereiro” (검색일: 2025. 9. 25.).

브라질은 그동안 금융서비스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up>82)</sup> 브라질 인구 약 2억 1천만 명 중, 성인 5,500만 명이 은행 계좌가 없고 2,000만 명이 은행을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금

80) “Brazil central bank to launch Pix installment feature in September”(2025. 4. 4.)(검색일: 2025. 9. 20.).

81) Agencia Brasil(2025. 4. 9.), “Juros médios cobrados pelos bancos chegam a 43,7% ao ano em fevereiro”(검색일: 2025. 9. 25.).

82) Santander, “Brazil: Reaching the consumer”(검색일: 2025. 9. 1.).

용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널리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 가구의 약 절반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대부분 신용카드 연체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실시간결제시스템인 PIX나 Nubank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면서, 가구의 은행계좌 보유와 PIX를 통한 실시간 지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PIX의 보급은 저소득층의 온라인 구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나 은행계좌가 없는 저소득층도 PIX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온라인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는 소득 불안정,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영세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제약점을 안고 있으나 거대한 인구 기반과 꾸준한 소비 수요로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전략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과 같은 기업들은 디지털 결제 방식, 혁신적인 신용 평가 모델, 유통망의 공식화, 다층적인 가격 설정 등을 도입하여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들이 거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Natura의 사례와 같이 일부 소비자층에서는 미용 및 패션과 같이 자아표현적 가치가 높은 상품에 대한 선별적 소비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는 비공식 경제권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기업전략이 단순한 저가 상품 제공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포용의 범위를 넓혀왔음을 나타낸다.

## 가. 저가 저품질 상품과 경제적 기회

BOP(Base of the Pyramid) 시장은 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저소득층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의미하며, 기존의 기업들이 간과해 왔던 영역이다(Prahalad and Hart 2002). BOP 소비자는 제한된 필수 서비스 접근성,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도 부족, 은행 계좌 미보유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에 속하는 인구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 소비자층을 주 시장으로 여기지만, 선진 시장의 성장 둔화 및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들은 점차 신흥국 내 저소득층 소비자, 즉, BOP 계층을 새로운 전략적 소비자군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인영, 정갑연, 채명수 2015).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BOP 시장은 인구 규모가 큰 데다가 개인위생용품, 식품, 가정생활 등 생필품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브라질의 경우 소규모 유통망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현금 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부 기업들에게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 시장은 소비자 1인당 구매력은 낮지만, 시장 내 인구가 많아 전체 소비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며, 기업들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한다면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조호현 2016).

그중 라틴아메리카 현지 기업 Ambev, Mercado Livre, Nubank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인 Daiso Japan과 코카콜라는 비공식 경제 기반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여 브라질 내 저가·저품질 상품 시장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 Ambev: 비공식 유통망의 디지털 전환 전략

Ambev는 아메리카 대륙 18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청량음료·맥주 제조 기업으로,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다. Ambev는 브라질의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유통망 접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물류망의 공식화와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의 유통 구조는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POS(Point of Sale) 시스템이나 정식 신용거래 인프라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잡화점과 소규모 소매상(botecos)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은 어려웠고, 기업의 매출 확대 기회 또한 제한되었다.

Ambev는 디지털 B2B 플랫폼인 'BEES'를 구축하여 비공식 유통 채널을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유통망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BEES'는 소규모 소매상인들이 기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주문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공식화된 자사 물류망을 통해 재고의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며 유통의 효율성 또한 제고될 수 있었다.

Ambev는 'BEES' 플랫폼을 단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들에게 POS 장비, 재고 관리 도구, 매장 운영 분석 툴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사 유통 생태계에 기존 비공식 경제에 존재하던 소매상 데이터를 통합시킬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Ambev는 제품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관리 최적화를 촉진하고 정교한 유통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Ambev의 사례는 기업이 기술 유입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와 기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낳도록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비공식 시장의 리스크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공식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으로 전환했다는 데서도 의의가 있다.

## 2) Mercado Livre: 디지털 금융접근성과 BOP 포용 전략

Mercado Livre(스페인어: Mercado Libre)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전자

상거래 기업이자 나스닥 100지수에 포함된 유일한 남아메리카 지역 기반 테크 기업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되어 본사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법인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 등록되어 있다. Mercado Livre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광범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다. Mercado Livre는 상품 유통, 디지털 결제, 금융서비스, 물류 인프라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특히, 브라질은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브라질 인구의 상당수는 은행 계좌 미보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전통적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금융 소외(financial exclusion)는 비공식 경제권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Mercado Livre는 자회사인 Mercado Pago를 통해 계좌 개설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결제 및 저장 수단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Mercado Pago 이용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 물품 구매, 요금 납부, 소액 저축,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낮았던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들의 활발한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Mercado Livre는 비공식 경제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을 촉진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및 마이크로 사업자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비공식 경제 인구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Mercado Livre 플랫폼은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포용에 기여했다.

Mercado Livre의 사례는 전자상거래 한 기업의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플랫폼 기반 기술과 디지털 금융 솔루션이 어떻게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공식 금융 제도에 속하지 못했던 비공식 경제 인구를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편입시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공식 경제 포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3) Nubank: 디지털 금융 포용과 대안적 신용 전략

Nubank는 2014년 브라질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디지털 네오뱅크(neobank)이며,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설립되었다. 기존의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복잡한 계좌 개설 절차를 유지하고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고비용 구조를 유지하며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주요 고객 대상으로 한 것과 반대로 Nubank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financially underserved population)을 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율은 70%, 현금카드 보유율은 약 60%, 신용카드 보유율은 약 30%에 그치는 등 브라질은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접근성은 낮은 국가로 여겨졌다(여밀립 2022). 이처럼 비공식 경제 인구 및 신용 미보유자(thin file)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 Nubank는 전통적 금융기관과는 달리 낮은 금융접근성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해 모바일 기반 무카드 신용카드(virtual credit card) 서비스, 수수료 없는 계좌 개설, 소액 대출 및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장하였다.

Nubank는 전통적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의 신용도를 산출할 수 있는 자체 알고리즘 기반의 대안적 신용 평가 모델(alternative credit scoring)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금융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비공식 경제 종사자나 저소득 청년층 등 전통적인 신용 시스템에 포용되지 못하던 다수의 브라질인들은 이제 신용 생활(credit life)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Nubank는 대면 금융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전통 은행과 다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고객 응대와 금융 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비용적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 구조는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원격 저소득층에게도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했다. 또한, 신속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Nubank는 포용적 금융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Nubank는 플랫폼 기반 접근, 전통적 은행과는 다른 방식의 데이터 중심 신용 평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 제공뿐만 아니라 금융 소외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는 전환 구조를 만들어내 비공식 경제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포용하지 못했던 고객군을 시장 안으로 통합시킨 결정적인 요소이다.

#### 4) Daiso Japan: 예측 가능한 소비경험을 통한 비공식 경제권 포용

Daiso Japan은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첫 매장을 개설한 이후, 2025년 3월 기준 매장망을 크게 확대하여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벨루오리존치, 브라질리아, 쿠리치바, 플로리아노폴리스, 벨렝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까지 전국에 총 7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Daiso Japan은 브라질 시장 진입 과정에서 일본에서 사용하던 100엔 균일가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현지 물가와 환율, 관세 구조를 반영하여 6.99헤알(약 1.3달러)부터 91.99헤알(약 17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설정하고, 핵심 상품군을 6.99~14.99헤알 사이의 가격대로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유통되는 유사 제품에 대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저소득층 소비자에게도 접근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비공식 경제권에 속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비 특성과 심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측 가능한 가격 구조와 반복적인 구매가 가능한 상품 구성으로 인해 주로 현금 중심의 소비를 하는 비공식 경제 소비자들은 일정 수준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Daiso Japan은 저가 브랜드라는 인식 속에서도 세련된 일본식 디자인과 깔끔한 매장 구성을 통해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심리적 만족감 또한 제공하였다.

브라질의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가성비와 자존감을 중시하는 가치소비

(value consumption)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최저가 상품 구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Daiso Japan은 가격 측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완성도 높은 제품과 고급스러운 매장 경험을 통해 이중적인 소비심리를 적절하게 포착하여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들에게도 사회적 포용을 경험하게 하고, 합리적 소비자라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Daiso Japan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 외에도 도심 외곽 등에 소형 매장이거나 인스타그램 매장을 운영하며 비공식 소비자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전략은 유통망을 확장하여 소비 편의성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이 Daiso Japan의 브라질 시장 진출전략은 단순히 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소비 경험과 가치 소비를 결합한 포용적인 시장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코카콜라: 취약계층 참여 기반 유통전략과 비공식 경제 포용

브라질 코카콜라 재단은 브라질 대도시 및 내륙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16세에서 25세 사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Coca-Cola Coletivo Jove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청년 역량 강화 및 고용 연계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25년 기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파트너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교육, 고용, 금융접근성이 낮은 비공식 경제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oca-Cola Coletivo Jovem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단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고객 서비스, 판매, 재고관리 등 소매업 분야 취업 시장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인턴십 및 고용 기회를 연계하여 코카콜라의 유통·소매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는 비공식 경제권에 속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공식 고용 시장 및 자영업 시장

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Coca-Cola Coletivo Jovem은 비공식 경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식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기반 커뮤니티, NGO, 사회단체를 거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 금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비공식 경제권에 속하는 저소득층 청년층의 참여도를 높였고, 코카콜라의 브랜드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Coca-Cola Coletivo Jovem은 지역사회에 고용 및 소득 기회 창출, 자영업 역량 강화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시장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실현하는 공유가치 전략(Shared Value) 기반의 기업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이윤 추구 외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행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면, Coca-Cola Coletivo Jovem이 사용한 공유가치 전략은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비공식 경제권 인구를 단순히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이자 판매자로 바라보는 접근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코카콜라는 비공식 경제권 청년층에게 고용 및 자영업 기회와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판매,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제적 기회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에 속한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가격·저품질 제품 중심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 행태 분석과 연구 결과는 항상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들이 저가 상품만을 선호하지 않으며,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소득국가(MIC: Middle-Income Country)의 도시 비공식 경제는 단순 생계유지 단계를 넘어 복합적이고 자기표현적인 소비 행태를 보인다. 제한된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미용, 식품, 통신, 패션 등 일상적 영역에서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와 사회적 지위 표시가 내포된 고가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기능적 효용이 아니라 자기표현적 소비(identity consumption)와 존엄성 회복의 표현으로 해석된다(Barki and Parente 2010).

특히, 브라질의 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계층 간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80%를 점유하는 극단적인 부의 집중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그대로 투영되는 등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를 촉진한다(Lavinas *et al.* 2023). 이는 시장이 생존을 위한 필수 소비와 지위 과시를 갈망하는 과시적 소비로 이분화됨을 의미한다 (Valencia-Morales, Rodríguez-Bailón, and Martínez 2022). 특히, 하위소득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선택적 사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특정 사회집단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려는 강력한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Barki and Parente 201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미엄 시장은 비공식 경제 소비자들에게도 상징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등 더 이상 고소득층만의 영역이 아닌 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화장품 브랜드 나투라(Natura)는 고가 제품군을 유지하면서도 방문판매 및 독립 판매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금융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자에게는 자영업 운영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모델은 소비자들에게는 자기표현의 수단을, 판매자에게는 경제활동 참여의 길을 열어주며 프리미엄 브랜드도 비공식 경제 내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비공식 경제 내의 프리미엄 소비 행태는 소비가 계층 재생산의 수단임과 동시에 자아 표현의 도구이기도 한 이중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비공식 경제권에 대한 포용 전략은 단순히 저가격·저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소비자의 자기표현과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 가치 중심의 제품 및 유통 설계로 그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6장



##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 1. 연구 결과 요약

브라질 비공식 경제는 크게 ① 낮은 소득·부의 이동성, ② 금융접근성의 취약성, ③ 비공식 노동을 통한 비용 회피 유인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 비공식 종사자는 생산성이 낮고 사회보장 혜택이 부족해 불안정한 소득과 낮은 저축 수준을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의 축적이 어렵고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빈곤의 덫'에 걸리게 된다. 직업훈련·기술교육을 통해 공식 부문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전환은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가계·기업 모두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많은 가계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으로 자산을 유지하고, 이는 높은 이자율 환경에서도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 비합리성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예금이 비효율적이거나, 금융지식 부족·현금선호 문화 등 비가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공식 기업 또한 정책금리 기반 대출 접근이 불가해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식화 이후에도 비공식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된다. 셋째, 기업은 사회보장 부담·해고비용 등을 피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 노동을 선호하고, 노동자 역시 조세·기여금 부담 없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상호 이익 구조가 더욱 공고해진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소득·부 불평등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브라질은 소득세의 누진성이 약하고 조세 기반이 좁아 세후에도 불평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며, 경기침체기에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해 남동부·남부는 고소득·고산업 집중 지역인 반면 북부·북동부는 저소득·저생산성이 지속되며, 도시화율이 높아 도심 내 파벨라 지역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정태적으로 비공식 경제의 저생산성이 불평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Aiyagari형 다자산모형을 통해 비공식 경제가 어떻게 불평등을

동태적으로 심화시키는지 분석한다. 비공식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자산(0% 수익률의 저수익 자산,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고수익 자산)을 두고, 고수익 자산 접근에는 일정한 비용(금융지식·금융서비스 접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저수익 자산에 저축하는 가계는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가계는 누진세를 부담한다. 이 설정하에서 금융접근비용이 높은 경제에서는 가계가 고수익 자산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저축이 감소하고, 자산가격 상승과 함께 균형이자율이 높아진다. 이는 자산보유층 가계에 유리하게 작용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며, 반대로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빈곤층이 자산 축적 경로에 진입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금융접근비용을 낮춘 시뮬레이션에서는 총저축 증가·자본축적 확대·균형이자율 하락이 나타나 불평등 완화로 이어진다. 또한 빈곤층의 매우 높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일시금 이전이 소비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자산 축적 효과는 약하게 만들며, 금융접근 장벽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동성 향상 효과도 제한적임을 모형이 보여준다.

4장에서는 브라질의 공식화·포용 정책을 정리한다. PETI, 불사 패밀리아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빈곤층 자녀 교육·근로유인을 강화하며 부의 이동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액대출·정책금융 등 금융포용 프로그램은 비공식기업·자영업자의 생산성 제고와 공식화 기반을 제공했다. 공식화 진전은 세수확대와 사회보장 재원 확충으로 연결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PRONATEC 등)은 고용률·임금·공식 고용 전환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최근 정책들은 교육·직업훈련과 함께 설계되어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지원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략 측면에서 브라질 비공식 경제는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가격 민감도·상징적 소비 패턴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PIX 확산으로 디지털 결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Natura 등의 사례는 디지털 금

용·혁신적 신용평가·가격 다층화·유통 공식화 등을 통해 비공식 경제권 소비자를 포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업 활동은 단순 저가 전략을 넘어서는 전략이 경제적·사회적 포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 가. 브라질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한-브라질

#### 공공 부문 간 협력

브라질 정부는 비공식 부문의 축소를 위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고, 브라질 공공기관과의 면접조사 결과 외국과의 협력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한국과 브라질의 비공식 부문에 관련한 공공기관 간에 협력 사업이나 정책자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부문 정책에 대한 협력 및 자문은 단기적 경제 효과는 없지만, 다음의 이유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양국 정부 기관 간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된다. 비공식 부문은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과제로, 이에 대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간 정책 파트너십의 깊이를 더한다. 둘째, 브라질 경제의 본질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비공식 부문은 브라질 노동 시장과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영역이며, 이에 대한 정책 협력 경험은 향후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전략 수립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협력 관계의 토대를 마련한다. 비공식 부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다. 지속적인 정책 대화와 협력은 양국 간 장기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협력 및 정책자문은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양국 관계의 질적 심화와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브라질 정부의 명확한 수요와 한국의 관련 경험을 고려할 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야다.

### 1)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브라질 창업·영세기업·소기업부 간 정책 협력

브라질의 비공식 부문에 속한 기업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종업원 수가 작은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다. 브라질 툴라 정부는 영세기업의 공식 부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에 창업·영세기업·소기업부(MEMP: Ministério do Empreendedorismo, da Microempresa e da Empresa de Pequeno Porte)라는 연방정부 부처를 출범시켰다. 부처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영세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창업을 전담하기에,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영세기업은 부처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MEMP 설립 과정은 툴라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 지우마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실 산하에 영세·소기업국(Secretaria da Micro e Pequena Empresa da Presidência da República)을 신설했으나 2015년 해산되었고, 2019년에는 경제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2023년 재집권한 툴라 대통령은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MEMP를 독립 부처로 출범시켰다.<sup>83)</sup> 이는 과거와 달리 비공식 부문 문제를 정부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브라질 정부는 비공식 부문 공식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 9월 MEMP 관계자 면담에 따르면, 정부가 직면하는 어려움의 하나는 정부의 지원 의지와 대

---

83) Jota(2023, 7, 9.). "Quem é Márcio França, anunciado ministro das Micro e Pequenas Empresas"(검색일: 2025. 12. 2.).

상자의 수용 의사 간 괴리다. 즉, 정부는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기업이나 노동자 측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생계를 위한 노동에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해야 하기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부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 비공식기업 역시 노동자 교육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배분할 여유가 없어, 정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 공식화와 노동자 교육은 정책 설계뿐 아니라 대상자의 현실적 제약과 참여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장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 정부는 외국 사례—즉 다른 국가가 비공식 부문 축소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MEMP는 신설 부처로서 여타 국가 정부와의 비공식 부문 공동 협력 사례가 아직 없으며, 현재까지는 미주개발은행(IADB)과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협력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MEMP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브라질의 MEMP나 그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브라질의 비공식 부문 축소에 대한 정책자문을 시행한다면 의미 있는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양국 기관 간 협력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sup>84)</sup> 한국이 지금까지 KSP로 브라질과 진행한 사업은 △과학기술혁신(STI) 체계 수립,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 △수출가공지역(EPZ) 개발 정책 등이다.<sup>85)</sup> 이들 사업은 주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나 양국 교역 증진과 직접 연계된 분야였다. 비공식 부문에서 정책 자문이 단기적

84) 한국의 ODA 기준이나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브라질은 ODA 협력대상국이 아니지만 한국형 기술협력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한 정부 간 협력은 가능하다.

85) KSP 홈페이지, “브라질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개발 정책과 실제: 한국사례와 지식전수의 시사점(2011/12),” “브라질 상파울루주 수도권 이동량 관측소 설계 및 대중교통 관리 개선(2022/23)”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고,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브라질이 KSP 협력우선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인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양국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과 상대 경제에 대한 깊은 상호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 2)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GAHP)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 추진

2024년 G20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는데, 브라질은 자국뿐 아니라 개도국들의 공통 당면 과제인 빈곤 및 기아문제의 해소를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공조 플랫폼인 ‘글로벌 기아·빈곤퇴치연합(GAHP: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GAHP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 발족되었다. GAHP는 기아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기아 및 빈곤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정책도 GAHP의 사업 범주에 해당한다. 브라질이 제안하여 발족한 GAHP는 FAO,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82개의 국가가 발족 시점부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sup>86)</sup>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GAHP 내에서 브라질의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제기구의 역량과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 GAHP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지식 필라(knowledge pillar)’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World Bank나 IADB와 같은 국제 다자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기금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브라질이 단독으로 양자 간의 정책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GAHP를 이용한다면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식과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이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GAHP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

---

86) Brasil 2024, G20(2024), “Under the leadership of Brasil, the Alliance against Hunger brings together efforts from 82 countries”(검색일: 2025. 12. 10.).

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하는 측면과 빈곤 및 기아를 퇴치한다는 의미에서 KSP를 통한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SP 정책자문사업인 ‘브라질 농업혁신을 위한 소규모 농가 육성방안(2013/14)’에서 보듯이 비공식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양국 간 상호 지식 및 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은 비공식 경제라는 명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비공식 고용의 공식 경제 편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대외적으로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과세 투명성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도입,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설치 및 기능 강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특정 업종의 현금 거래 관리, 임대소득 과세 등을, 비공식 고용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교육과정 외의 직업교육 확대 등을 실시했다. 브라질이 시행해 온 비공식 대응 정책을 감안하면 양국은 상호 공유 가능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공식 대응 정책에 디지털을 접목할 경우 ICT 강국인 한국이 주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책자문사업이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의 주제는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 당국은 현재 조세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법으로 과거부터 비공식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공식 부문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복잡한 세제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간소화된 세무 신고와 납부절차를 제공하는 Simples Nacional 제도를 운영하거나 SEBRAE<sup>87)</sup>를 통해 민관 운영의 창업 컨설팅, 노동자 교육 및 훈련, 공식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생산성은 낮은 편으로 MEMP 관계자의 주장에 의하면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생산성은

---

87)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미국 노동자의 1/4에 불과하다.

MEMP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도 브라질의 명확한 협력 수요를 확인하였으나 한국의 유관기관은 이러한 수요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양국 간 비공식 경제 공식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나. 소비재 시장 진출 시 비공식 부문의 양분화 된 소비자의 특성 고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이지만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수출보다 현지 생산을 선택해 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이 브라질에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며, 이들이 판매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재는 주로 중산층 이상 소비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 시장 진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기업도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대기업 중심의 내구재에서 중소기업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소비재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은행의 PIX 시행 이후 디지털 결제와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룰라 정부의 소득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비공식경제권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많은 비공식경제권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한국 소비재 제품들은 기존 대기업 제품과 다른 시장 접근을 필요로 한다. 화장품, 식품, 의약품은 가격대와 품질 스펙트럼이 넓어 전체 소득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특성 때문에 브라질

의 양극화된 소득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도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다. 같은 제품군 내에서도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매 결정이 크게 달라지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패턴, 유통 채널 접근성, 브랜드 선호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단일한 마케팅 전략으로는 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 브라질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재 기업의 효과적인 브라질 진출을 위해서는 브라질의 양극화된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소득계층별 소비자 구매력과 소비 행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한 소득 데이터를 넘어 각 계층의 소비 우선순위, 브랜드 인식, 가격 민감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득계층별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인과 중저가 라인을 구분하거나, 계층별로 다른 브랜드를 론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 각 소득계층이 접근 가능한 유통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한국 기업의 특징인 조달입찰, 대리점 방식, 프로젝트형 진출을 벗어난 공동가치창출(Shared Value)과 같은 저소득층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기업전략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 1) 소득 계층별 제품 차별화

한국 기업은 브라질 소비자들이 소득 계층에 따라 소비 행태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정해야 한다. 브라질은 품질을 중시하는 약 4,000만 명의 고소득층과 가격에 민감한 약 1억 500만 명의 저소득층 소비자가 공존하는 양극화된 시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제품군이라도 계층에 따라 선택 기준이 품질과 가격으로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단일한 제품 전략으로는 원하는 매출실적을 거두기 어렵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단순히 최저 가격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D와 E 계층 소비자들은 가격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지만, 자존감

을 존중해주는 제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 주류 사회로의 편입 열망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품 라인은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디자인과 브랜드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aiso Japan의 사례처럼 다층 가격 구조를 통해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매장 분위기로 가치소비 심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A와 B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은 품질과 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득층은 높은 관세와 유통 비용으로 인해 가격이 2~3배 상승하더라도 고품질 수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시장 진입 전 소득 계층별 소비자 행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동일 제품군 내에서도 목표하는 계층에 따라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 2) 소득 수준에 따라 유통 차별화

소득 계층에 따라 이용하는 유통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유통 채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라인으로 진출하고 브랜드 가치와 품질 우수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유통라인 중 백화점, 전문 매장, 온라인 프리미엄 채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중산층 시장은 가격 대비 가치를 중시하므로, 합리적 가격대의 중급 제품 라인이 적합하다. 대형 유통체인, 일반 온라인 쇼핑몰 등이 주요 유통 채널이 될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의 저소득층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으며 지역 사회 기반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 시장을 공략하려면 현지화된 저가 제품 개발과 함께 동네 소매점이나 재래시장 등과 같은 유통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소비의 상당 비중은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동네가게(botecos), 노점상, 지역 도·소매업자 등 비공식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3) 공동가치(Shared Value)와 같이 저소득층 소비자와 공생하는 전략 마련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은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저소득층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업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코카콜라의 Coletivo Jovem 프로그램은 이러한 접근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비공식 경제권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유대를 구축했다.

우리 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공식 경제 내 저소득층 소비자 및 판매자와 공존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bev가 BEES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상인들에게 디지털 주문 시스템과 경영 지원 도구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 기업도 비공식 유통망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디지털화하고 공식 유통 채널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영세 상인들이 경영을 개선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Natura의 방문판매처럼 저소득 계층에게 판매자로서의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 전략도 효과적이다. 특히, 브라질 저소득층은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판매나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공유가치 전략은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국 기업은 CSR 차원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비공식 경제에 속한 소비자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공생한다는 관점에서 브라질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인영, 정갑연, 채명수. 2015. 「브라질 저소득소비(BOP) 시장의 특성과 마케팅전략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19(2), 236-258.
- 배유진. 2024. 「비공식 경제 활동으로 존속하는 아프리카 영세 및 소규모 채굴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의 원인 분석: 가나의 금 채굴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73, 109-144.
- 백영연. 202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 연구: 디지털 전환과 나이지리아 영화산업의 비공식 경제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71, 41-77.
- 송현욱. 2022. 「북한의 사경제활동과 비공식 노동시장화에 대한 제도적 고찰」. 『홍익법학』, 23(2), 313-339.
- 여밀림. 2022. 「브라질 디지털뱅크 Nubank의 성장과정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윤상하, 김성한, 최홍석, 송예나, 백인걸, 오준석. 2024.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연구보고서 2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호현. 2016. 「중남미 BOP시장과 BOP시장전략 유형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18(1), 57-91.

### [외국문 자료]

- Aiyagari, S. Rao. 1994. "Uninsured idiosyncratic risk and aggregate sav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3), 659-684.
- Allen, Jeffrey, Shanthi Nataraj, and Tyler Schipper. 2018. "Strict duality and overlapping productivity distribution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firm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5, 534-554.
- Almeida, Rita, Nicole Amaral, and Fabiana de Felicio. 2016. "Assessing Advances and Challenges in Technical Education in Brazil." A

World Study.

- Araujo, Julia P. and Mauro Rodrigues. 2016. "Taxation, credit constraints and the informal economy." *Economia*, 17(1), 43-55.
- Bai, Yan, Patrick J. Kehoe, and Fabrizio Perri. "World Financial Cycles." 2019 meeting papers, Vol. 1545.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 Barki, Edgard. 2014. "Consumer Behavior of the Base of the Pyramid Market in Brazil." FGV.
- Barki, Edgard and Juracy Parente. 2010. "Consumer Behaviour of the Base of the Pyramid Market in Brazil." *Greener Management International*, 56, 11-23.
- Bittencourt, Gilson, Reginaldo Magalhães e Ricardo Abramovay. 2005. "Informação de crédito: um meio para ampliar o acesso dos mais pobres ao sistema financeiro." *Pesquisa & Debate*, 16(2).
- Blanchflower, David G., Andrew Oswald, and Alois Stutzer. 2001. "Latent Entrepreneurship across Na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45(4), 680-691.
- Bosch, Mariano and William Maloney. 2010.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market dynamics using Markov processes: An application to informality." *Labour Economics*, 17(4), 621-631.
- CÂMARA DOS DIPUTADOS. 2012. "LEI No 12.666, DE 14 de JUNHO DE 2012."
- \_\_\_\_\_. 2018. "LEI No 13.636, DE 20 de MARÇO DE 2018."
- De Soto, Hernando. 1989. "The Other Path: The Invisible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2000.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New York: Basic Books.
- Elgin, M. Ceyhan, Ayhan Kose, Franziska Ohnsorge, and Shu Yu. 2024. "Discussion paper series: Understanding Informality." CEPR.
- Fagereng, Andreas, Luigi Guiso, Davide Malacrino, Luigi Pistaferri. 2020. "Heterogeneity and persistence in returns to wealth." *Econometrica*, 88(1), 115-170.
- Falco, Paolo and Luke Haywood. 2016. "Entrepreneurship versus Joblessness: Explaining the Rise in Self-Employ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8, 245-265.

- Gifford, Baillie and Plano CDE. 2022. "Financial inclusion in Brazil 2022."
- Gonzalez, Roberto Henrique. 2010. "EMPLOYMENT POLICIES IN BRAZIL: HISTORY, SCOPE AND LIMITATIONS." Working Paper, No. 70. IPC-UNDP.
- Granda, Catalina and Franz Hamann. 2015. "Informality, saving and wealth inequality in Colombia." IDB Working Papers.
- Günther, Isabel and Andrey Launov. 2012. "Informal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Opportunity or Last Resor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7(1), 88-98.
- Haanwinckel, Daniel and Rodrigo Soares. 2021. "Workforce composition, productivity, and labour regulations in a compensating differentials theory of informal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8(6), 2970-3010.
- Harris, John R. and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 IBR, FGV, and ETCO(2008), "An estimate of shadow economy in Brazil."
- IMF. 2023. "Brazil: Selected Issues," 53-56.
- ILO. 1993.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_\_\_\_\_. 2022. "Social Protection in Action: Brazil Country Brief."
- Kaplan, Greg and Giovanni L. Violante. 2014. "A model of the consumption response to fiscal stimulus payments." *Econometrica*, 82(4), 1199-1239.
- \_\_\_\_\_. 2022.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in heterogeneous agent models." *Annual Review of Economics*, 14(1), 747-775.
- Kumar, Anjali, Thorsten Beck, Cristine Campos, Soumya, Chattopadhyay. De Xavier Pinto, and "Assessing financial access in Brazil (English)."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50. Washington, D.C.: World Bank.
- Kumar, Anjali, Thorsten Beck, Cristine Campos, and Soumya Chattopadhyay. 2005. "Assessing Financial Access in Brazil (English)." World

-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50. Washington DC. World Bank.
- La Porta, Rafael and Andrei Shleifer. 2014. "Informali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109-126.
- Lavinas, L., A. C. Cordilhna, L. Bressan, and P. Rubin. 2023. "Mapping Recent Trends in the Distributions of Wealth in Brazil."
- Levy, Santiago. 2008. "Good Intentions, Bad Outcomes: Social Policy, Informality, and Economic Growth in Mexico."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2), 139-91.
- Loayza, Norman. 2018. "Informality: Why Is It So Widespread and How Can It Be Reduced?" Research & Policy Brief 20. Kuala Lumpur: World Bank.
- Loayza, Norman, Ana María Oviedo, and Luis Servén. 2006,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Cross-Country Evidence." Linking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 Lusardi, Annamaria, Pierre-Carl Michaud, and Olivia S. Mitchell. 2017. "Optimal financial knowledge and wealth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5(2), 431-477.
- Maloney, William. 2004. "Informality Revisited." *World Development*, 32(7), 1159-1178.
- Meghir, Costas, Renata Narita, and Jean-Marc Robin. 2015. "Wages and Inform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1509-46.
- Mindreau, Manuel. 2025. "The relaunching of industrial policy in Brazil: What have rare earths got to do with it?"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24.
- Morgandi, Matteo, Katharina Fietz, Malin Ed, and Cabriel Oliveira. 2022. "From Struggle to Opportunity. The profile of Brazil's working poor and implications for economic inclusion." The World Bank.
- Nascimento, Máyra Vidal and Elisabete Corcetti. 2014. "As Principais Causas da Não Formalização das Empresas na Cidade de

- Guarapari/ES.” VIII EGEPE.
- Nayak, Bhabani Shankar and Ronaldo Viera de Silva. 2019. “Evolution and Effects of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n Microfinance in Brazil.” *Latin American Policy*, 10(1).
- OECD. 2018. “Getting Skills Right: Brazil.”
- \_\_\_\_\_. 2023. “Informality and Globalisation: In Search of a New Social Contract.” OECD Publishing.
- Paula, Áureo and Jose Scheinkman. 2010. “Value-added taxes, chain effects, and informality.”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4), 195-221.
- Perry, Guilermo, William Maloney, Omar Arias Diaz, Pablo Fajnzylber, Andrew Mason, Jaime Saavedra, and Mariano Bosch Mossi. 2007. “Informality: Exit and Exclusion.” World Bank.
- Portella, Alysson, Solange Gonnçalves, Pedro Ferreira de Souza, and Sergio Firpo. 2025. “Earnings volatility in Brazil(2012-2023).” IPEA.
- Prahalad, C. K. and S. L. Hart. 2002.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Strategy+Business*, 20, 1-13.
-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Formaliz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FORLA)/ILO. 2014. “Policies for the formal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Brazil.”
- Rauch, James E. 1991. “Modeling the Informal Sector Formall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5(1), 33-47.
- Ribeiro, Cristiane. 2025. “Pix bate recorde e registra quase 280 milhões de transações em un dia.”
- Romanello, Michele and Flávio de Oliveira Gonçalves. 2017. “The transition of brazilian workers to formality: evidences from duration analysis.” *Economía, sociedad y territorio*.
- Schapiro, Mario G. 2014. “Ativismo estatal e industrialismo defensivo: Instrumentos e capacidades na política industrial brasileira.”
- Schneider, Friedrich, Andreas Buehn, and Claudio E. Montenegro. 2010. “New Estimates for the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4(4), 443-461.
- Silva, Tiago Falcão *et al.* 2023. “New Bolsa Famíl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2023.”

- Souza, Maysa Santos, Selma dos Santos, and Gustavo Souza de Melo. 2024. "EMPREENDEDORISMO NO BRASIL: UM ESTUDO ACERCA DA INFORMALIDADE NO MUNICÍPIO DE ITABELA-BA, Revista." *Ibero-Americana de Humanidades, Ciências e Educação*.
- Tendências Consultoria. 2024. "Classes de Renda e Consumo no Brasil: 2023-2034."
- Ulyseia, Gabriel. 2018. "Firms, Informality, and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from Brazil." *American Economic Review*, 108(8), 2015-2047.
- \_\_\_\_\_. 2020. "Informality: Causes and Consequences for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Economics*, 12, 525-546.
- Valendia-Morales, A., R. Rodríguez-Bailón, and R. Martinez. 2022. "Economic inequality increases the preference for status consump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 WIEGO. 2021. "Social Protection for informal workers: Trends and Changes." Social Protection Briefing Notes No. 3.

#### [온라인 자료]

- 브라질 정부. 2025. "Receber o Bolsa Familia." <https://www.gov.br/pt-br/servicos/receber-o-bolsa-familia>(검색일: 2025. 9. 20.).
- 브라질 통계청(IBGE). "Per capita earnings hit record and inequalities fall to the lowest level since 2012."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en/agencia-news/2184-news-agency/news/43324-rendimento-per-capita-e-recorde-e-desigualdades-caem-ao-menor-nivel-desde-2013>(검색일: 2025. 9. 1.).
- \_\_\_\_\_. "In 2023, wage bill and per capita household earnings hit record."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en/agencia-news/2184-news-agency/news/39816-in-2023-wage-bill-and-per-capita-household-earnings-hit-record>(검색일: 2025. 9. 1.).
- \_\_\_\_\_. "2022 Census: 16.4 million persons in Brazil lived in Favelas and Urban Communities."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en/agencia-news/2184-news-agency/news/41813-2022-census-16-4-million-persons-in-brazil-lived-in-favelas-and-urban-communities>(검색일: 2025. 9. 1.).

- Agencia Brasil. 2025. “Juros médios cobrados pelos bancos chegam a 43,7% ao ano em fevereiro.” (April 9).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5-04/juros-medios-cobrados-pelos-bancos-chegam-437-ao-ano-em-fevereiro>(검색일: 2025. 9. 25.).
- Araujo, Bruna. 2025. “Pix and Progress: Democratizing Financial Services.” <https://business.cornell.edu/article/2025/05/democratizing-financial-services/>(검색일: 2025. 10. 27.).
- Banco Central do Brazil. 2025. “Brazilian Payments System: Pix.” [https://www.bcb.gov.br/en/financialstability/pix\\_en](https://www.bcb.gov.br/en/financialstability/pix_en)(검색일: 2025. 11. 6.).
- Brasil 2024, G20. 2024. “Under the leadership of Brasil, the Alliance against Hunger brings together efforts from 82 countries.” <https://www.gov.br/g20/en/news/under-the-leadership-of-brasil-the-alliance-against-hunger-brings-together-efforts-from-82-countries>(검색일: 2025. 12. 10.).
- “Brazil central bank to launch Pix installment feature in September.” 2025. *Reuters*. (April 4). <https://www.reuters.com/technology/brazil-central-bank-launch-pix-installment-feature-september-2025-04-03/>(검색일: 2025. 9. 20.).
- Brugel. 2024. “Global and Regional Gini Coefficients of income inequality.” <https://www.bruegel.org/dataset/global-and-regional-gini-coefficients-income-inequality>(검색일: 2025. 9. 1.).
- Cepalstat. “Gini concentration index according to geographical area.” <https://statistics.cepal.org/portal/inequalities/incomes.html?lang=en&indicator=3289>(검색일: 2025. 9. 1.).
- \_\_\_\_\_. “Share of personal income by per capita income deciles.” <https://statistics.cepal.org/portal/inequalities/incomes.html?lang=en&indicator=3291>(검색일: 2025. 9. 1.).
- Contabeis. “Salario Minimo de 1994 a 2025.” <https://www.contabeis.com.br/tabelas/salario-minimo/>(검색일: 2025. 9. 25.).
- Global Finance. 2025. “Pix becomes Brazils top transaction method.” <https://gfmag.com/transaction-banking/pix-becomes-Brazils-top-transaction-method/#:~:text=%E2%80%9CPix%20has%20transformed%20the%20Brazilian%20economy;%20it,of%20the%20informal%20economy%2C%20and%20gave%20the>(검색일: 2025. 11. 6.).

- IDB. 2025. "Tackling Informality in Brazil: The Hidden Costs of Labor Inspections." <https://blogs.iadb.org/ideas-matter/en/tackling-iln-formality-in-brazi-the-hidden-costs-of-labor-inspections/>(검색일: 2025. 10. 22.).
- Jota. 2023. "Quem é Márcio França, anunciado ministro das Micro e Pequenas Empresas." (July 9). <https://www.jota.info/executivo/quem-e-marcio-franca-anunciado-ministro-das-micro-e-pequenas-empresas>(검색일: 2025. 12. 2.).
- Scognamiglio, Heloísa. 2025. "Pix cresce enquanto uso de dinheiro físico encolhe no Brasil, aponta estudo do Google." <https://www.estadao.com.br/economia/Pix-cresce-uso-dinheiro-fisico-em-especie-encolhe-brasil-pesquisa-google-nprei/>(검색일: 2025. 10. 27.).
- SEBRAE. 2025. "Entenda o que são OSCIPs e como elas funcionam." <https://sebrae.com.br/sites/PortalSebrae/arquivos/entenda-o-que-sao-oscips-e-como-elas-funcionam,bc91c97a0a9de710VgnVCM10000d701210aRCRD>(검색일: 2025. 11. 5.).
- Santander, "Brazil: Reaching the consumer." <https://santandertrade.com/en/portal/analyse-markets/brazil/reaching-the-consumers>(검색일: 2025. 9. 1.).
- World Bank. "Gini index, Brazil."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locations=BR>(검색일: 2025. 9. 1.).
- \_\_\_\_\_. "Urban population(% of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검색일: 2025. 10. 30.).
- \_\_\_\_\_. 2004. "Brazil: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http://hdl.handle.net/10986/14599> License: CC BY 3.0 IGO.
- World Population Review. "Gini Coefficients by Country."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gini-coefficient-by-country>(검색일: 2025. 9. 1.).

[DB]

브라질 통계청(IBGE).

World Bank Group. 2025. The Global Findex Database.

World 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5. 11. 25.).



# 목록



## 모형 설계 및 조정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에 대한 충격요소(transitory shock)가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가정한다.  $c_t, a_t, b_t, l_t$ 는 각각  $t$ 기의 소비, 저수익 자산, 고수익 자산, 노동생산성이다.  $u(c)$ 는 해당 기의 효용함수이며,  $\beta$ 는 시간선호도 모수이다.  $\xi$ 는 고수익 자산에 접근하는 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다.  $r_a, r_b, w$ 는 상대가격으로 비내구재 소비( $c_t$ )의 가격이 1이라고 정규화(normalize)했을 때, 각각 저수익 자산의 수익, 고수익 자산의 수익,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다. 다음으로,  $\tau$ 는 세전 임금이 주어졌을 때 세후 임금을 계산하는 함수로 본문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였다.  $T$ 는 일시금 이전액(lump-sum transfer)이다. 마지막으로  $\phi$ 는 대출한도이다.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utility maximization problem)는 다음과 같다.

$$\max E_0 \left[ \sum_{t=0}^{\infty} \beta^t u(c_t) \right]$$

$$c_t + a_{t+1} + b_{t+1} + 1_{b_{t+1} > 0} \xi(l_t) = (1 + r_a)a_t + (1 + r_b)b_t + \tau(wl_t) + T$$

$$c_t > 0, a_t \geq -\phi, b_t \geq -\phi$$

$$\tau(wl_t) = \begin{cases} wl_t & \text{if } b_{t+1} = 0 \\ \tau_1 (wl_t)^{1-\tau_2} & \text{if } b_{t+1} > 0. \end{cases} \quad [\text{부록 식 1}]$$

모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고수익 자산에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저수익 자산은 고수익 자산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다시 말해, 고수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 저수익 자산과 고수익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자산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문제를 단순화시키며 고수익 자산  $b_t$ 와 소비  $c_t$ 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비슷하게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계는 오로지 저수익 자산  $a_t$ 와 소비  $c_t$ 를 결정하면 된다.

둘째, 수익률에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phi$ 로 고정되어 있다. 이 또한 모형단순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해당 값은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범주 내로 설정된다. Aiyagari(1994)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가진 가계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자연발생 대출한도(natural borrowing constraint)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별 대출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실제로는 임금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모형 내에서 임금별 대출한도 이질성이 가지는 양적 함의(quantitative implications)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대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저수익 자산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고수익 자산 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배전략(dominant strategy)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수익 자산의 대출한도는 0이 된다. 이는 의도된 것으로 향후 일반균형을 계산함에 있어 저수익 자산 시장은 실질 이자율 0으로 가계 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했으며, 고수익 자산만이 기업생산활동(aggregate production)의 투입량(input)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무(無)수익 자산을 가계끼리 상호 간 대출할 수 있지만 해당 자산의 총합은 일반균형 하에서 0이 되어야 하며 총생산(aggregate output)의 자산투입량(capital input)은 고수익 자산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고수익 자산을 공식 경제로 분류하기 때문에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가계의 노동임금에 대한 조세도 달라지게 된다.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 나타나는  $\tau$ 는 자산접근비용( $\xi$ )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wl_t$ 이며, 지불할 경우  $\tau_1(wl_t)^{(1-\tau_2)}$ 로 누진세를 부담해야한다.

기업은 동질적(representative)이며 완전경쟁적이다. 생산함수는 Cobb-Douglas 함수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Y = K^\alpha L^{1-\alpha} \quad \text{[부록 식 2]}$$

$Y$ 는 총생산량,  $\alpha$ 는 자산소득분배율,  $K$ 는 총자산,  $L$ 은 총노동력이다. 기업의 이익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ax Y - wL - (r + \delta)K \quad [\text{부록 식 3}]$$

$\delta$ 는 자본감가상각률이다.  $w, r$ 은 상대가격으로 각각 노동력과 자본의 가격이다.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 다뤘듯이 고수의 자산만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r$ 은 고수의 자산에 대한 가격이다.

매기 정부 예산이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세입은 노동급여에 대한 누진세이고, 세출은 일시금 이전액  $T$ 이다. 전체 가계의 크기가 1로 정규화되어 있기에 세입과 세출의 등식은 다음과 같다.

$$\int wl_t - \tau(wl_t) d\mu = T \quad [\text{부록 식 4}]$$

$\mu$ 는 정태적 균형에서의 분포도를 의미하며, 노동급여충격은 외생적이기에 위 식의  $T$ 는 고정이다. 정부는 균형예산을 고수하며  $G = T$ 이다.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ing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C_t + (1 - \delta)K_t - K_{t+1} + G_t + C_{t,\xi} = Y_t. \quad [\text{부록 식 5}]$$

가계가 고수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하는  $\xi$ 는 사회적 비용이며 이를 경제 전체에 대해 합산한 값을  $C_{t,\xi}$ 로 표현한다. 그 외  $C_t, K_t, G_t, Y_t$ 는 각각 총소비, 총자산, 정부지출, 총생산량을 의미한다.

부록 표 1. 모형 모수(Parameters)

(단위: 실수)

모수	설명	값	모수	설명	값
$\beta$	time discount factor	0.96	$\rho$	persistence of productivity	0.975
$\sigma$	risk averse parameter	2.0	$\sigma_z$	s.e. of transitory shock	0.17
$\delta$	capital depreciation rate	0.069	$\tau_1$	progressive tax parameter 1	0.58
$\alpha$	capital share	0.33	$\tau_2$	progressive tax parameter 2	0.18
$\phi$	borrowing constraint	0.006	$T$	lump-sum transfer	0.51

자료: 저자 작성.

우선 이 모형경제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이고 균형에서 결정되는 변수가 세 개 있다: 총자산(aggregate capital), 대출한도(borrowing constraint), 일시금 이전액(lump-sum transfer)이다. 총자산은 상대가격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자율을 결정한다.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균형객체(equilibrium object)이기도 하다. 대출한도는 해당 모형에서 저(무)수익 자산의 총합을 결정한다. 저수익 자산의 국가 전체의 재무상태표가 일치해야하며 해당 자산의 총합은 0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시금 이전액은 정부의 세수이자 세출이다.

모형 조정(calibration)을 위한 목표치는 부와 관련된 수치를 사용한다. 2019년 기준, 상위 1%, 10%, 50%의 부점유율(wealth share)이 각각 48.3%, 79.6%, 100.4%로 알려져 있다.<sup>88)</sup> 또 가계 중 음의 부를 가진 비중이 약 30%로 추정된다. 목표치 조정을 위한 내부변수(internal variable)는 고수익자산 접근비용( $\xi$ )이다. 모형 모수(parameters)는 기존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들을 이용했다.<sup>89)</sup>

88) Research Center on Macroeconomics of Inequalities(2024. 6.), "Inequality in Brazil: Income, Wealth, and Tax Distribution," Friedrich, Ebert, Stiftung 참고.

89) 다수의 기존 문헌은 미국경제의 수치를 추정했고 이 모형에서도 같은 수치를 사용했다. 브라질 경제에 맞는 수치를 새로 추정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3장에서 비공식 경제가 브라질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 모형으로 수치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모형을 통해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록 표 2. 모형 조정(Calibration)

구분	상위 1% 부점유율 <sup>90)</sup>	상위 10% 부점유율	상위 50% 부점유율	음의 부비중	실질 이자율 <sup>91)</sup>
데이터	48.3%	79.6%	100.4%	30.6%	5.98%
단자산모형	6.60%	42.41%	101.0%	39.22%	3.53%
다자산모형	12.98%	78.88%	104.3%	60.68%	3.88%

자료: 저자 작성.

먼저 금융접근비용( $\xi$ )은 0.2로 모형 내에서 추정되었으며 (세전)근로소득의 중간값인 1.16의 약 17.2%에 해당한다. 높은 금융비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총 자산을 감소시킨다. 첫째, 고수의 자산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계의 입장에서 고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의 편익은 높은 이자율의 혜택이다. 비용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지불해야 하는 금융접근비용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를 선택한다. 둘째, 금융접근비용은 부유층의 고수의 자산 투자의 비용이자 사회적 손실이다. 부유층이 금융접근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더 적은 총저축으로 이어진다.

다자산모형(two-assets model)을 전술한 바와 같이 도출한 뒤 그에 대응되는 단자산모형(single-asset model)을 계산했다. 기존의 다자산모형에서 도출되는 대출한계와 일시금 이전액을 고정시킨 뒤 Aiyagari(1994) 모형의 일반 균형을 도출했다. 이후 단자산모형과 다자산모형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부점유율과 음의 부를 가진 가계 비중을 계산하였다. 결과는 [부록 표 2]에

90) Hubmer, Krusell, and Smith(2021)에서 주장하듯 모형에서 최상위권의 부점유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 설계한 모형은 최상위권의 부비중을 맞추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모형 조정 후 정책함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평등도와 이자율의 역할에 집중해서 결과를 해석한다.

91)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zil)의 기준금리(Selic)의 연평균치가 5.98%이다. 모형에서는 실질 이자율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에서 IPCA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해야하지만 모형에서의 이자율은 균형객체(equilibrium object)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의미하지 않다. 단자산과 다자산 모형에서의 이자율 차이에서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초점이다.

나타난다.

다자산모형은 단자산모형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음의 부를 지닌 가계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다자산 모형 내에서 시장이자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계가 대출한도에 밀집해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들은 실질이자율 0%에 직면하게 되며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를 경험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니 계수가 유의미하게 악화된다는 점이다. 상위 1%, 10%의 부점유율이 각각 6.38%p, 36.47%p 증가했다. 시장이자율은 다자산모형에서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전술한 금융접근비용 때문이다. 금융접근비용이 총저축을 감소시키고 상대가적인 이자율을 높이고 임금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된다. 높은 이자율은 부유층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노동가치의 하락은 빈곤층을 더 빈곤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저(무)수익자산의 대출자와 채무자의 역할이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고수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노동임금 관련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높지만 부가 적은 가계에게 비공식 경제에 계속 머물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이러한 성격의 가계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들이 현금성 저수익 자산의 채권자가 된다. 반면에 빈곤층 중에서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가계는 현금성 저수익 자산의 채무자가 되며 대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궁극적으로 부의 이동성과 소비자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전에 간단한 정책실험을 추가로 진행한다. 공식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핵심 정책 과제이며, 주로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4년 APEC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며, 브라질 중앙은행의 PIX와 같은 제도적 노력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물론 디지털전환이 실제로 빈곤층의 공식 금융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논쟁은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금융접근비용( $\xi$ )이 감소한 경우를 가정하

여 균제 상태 간 비교(steady state-to-steady state comparison)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sup>92)</sup>

금융접근비용을 0.2에서 0.18로 10% 감소시킨 뒤, 일반균형을 새로 계산한다. 그 과정에서 계산되는 대출한도와 일시금 이전액은 각각 0.505와 0.1763이며 벤치마크 모형의 대출한도와 일시금 이전액은 각각 0.54과 0.1459이다.

먼저, 대출한도가 더 낮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금성 무수의 자산의 채권자가 본인의 자산을 고수의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높은 근로소득을 받지만 비교적 부의 수준은 낮았던 가계가 무수 자산의 채권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더 이상 채권자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며 기존의 채무자는 줄어든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 한도를 낮추게 된다.<sup>93)</sup> 추가로 일시금 이전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더 많은 가계가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면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록 표 3. 정책실험: 균제상태 간 비교

구분	상위 1% 부점유율	상위 10% 부점유율	상위 50% 부점유율	음의 부비중	시장 이자율
벤치마크	12.98%	78.88%	104.29%	60.68%	3.88%
정책실험	10.44%	64.80%	103.75%	57.12%	3.68%

자료: 저자 작성.

금융접근비용 감소와 함께 총저축이 늘어나고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3.88%에서 3.68%로 약 0.2%p 감소한다. 그에 따라 불평등 지수도 개선된다. 먼저 상위 1%의 부점유율(wealth share)이 12.98%에서 10.44%로 감소하고, 상위 10%의 부점유율은 78.88%에서 64.80%로 감소한다. 상위 50% 부점유율

92) 완전예견(perfect foresight) 전환동태분석(transitional dynamics)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균제상태 간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데에 있다. 일대일 대응의 후생효과 분석이 불가하다.

93) 물론 이는 모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외생적으로 맞추는 과정의 일부이다.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도 소폭이지만 약 0.54%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균제상태 간 비교이기 때문에 위의 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금융접근이 용이해지면 불평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sup>94)</sup> 다만, 금융접근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 공식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동시에 최빈곤층이 현금성 무수익 자산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고임금의 상대적 빈곤 계층이 저수익 자산의 채권자에서 고수익 자산 투자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94) 크게 두 가지 채널이 있다. 하나는 세수확보가 증가하고 이전소득이 커지며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계에게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시장 이자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부유층이 추가적으로 자산을 쌓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 Understanding the Brazilian Consumer Econom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Government: Large-Scale Informal Economy Involved

Sunghwan Kim, Sungwoo Hong, Jino Kim, Mi Sook Park, and Euna Son

Brazil has become one of the most attractive partners, especially in light of recent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Rising uncertainty and instability call for the need to diversify trading partners. As of 2024, Brazil's GDP has reached 2.2 trillion US dollars. Brazil ranks as the world's seventh-largest economy, following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ropean Union, Japan, India, and the United Kingdom. Despite its significance, however,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Brazilian economy. This report aims to analyze Brazil's consumer market through the lens of the informal economy in particular. The informal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ies that would be included in GDP if monitored by the government but are not officially documented due to institutional or regulatory contexts. The size of Brazil's informal economy is so large that understanding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Brazilian economy in depth. More specifically, the informal economy share in Brazil amounts to 33.4% of GDP. This figure is significantly high

for a country with a decent level of GDP per capita compared to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This report exclusively investigates three features of the Brazilian economy, all of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ormal economy. First, the low-income and low-wealth groups experience severe and the poverty rate is high. Both income and wealth mobility are low. Inequality is pronounced not only in a static sense but also in a dynamic sense. Second, access to financial intermediaries is limited for both low-income (low-wealth) household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s of 2025, the Selic rate is 15%. Borrowing rates for households and SMEs are particularly high, as household borrowing rates typically exceed 50% annually. Although fintech has recently made access more feasible, demand for cash transactions still remains high. Lastly, informal labor contracts are prevalent. Approximately 37.9% of total employment is informal.

Furthermore, Brazil is well known for its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lthough the income Gini coefficient has declined over the last 30 years, it remains high, exceeding 50. The top 10% income share in Brazil is 39.1%, which is higher than the Latin American average of 34.2%. Meanwhile, the bottom 10%'s income share is 1.4%, which is relatively lower than the Latin American average of 1.7%. Brazil also demonstrates a high degree of urban concentration, contributing to heightened regional inequality.

Using a simplified macroeconomic model, this report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underlying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informal economy exacerbates the above-mentioned features. Limited access to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the prevalence of informal labor worsen inequality and generate a poverty trap. Low returns on assets for wealth-poor households raise thei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leading to low savings. As the informal economy grows, capital accumulated in the formal sector shrinks and the rate of return rises. Wealthy households benefit from the high returns, and polarization widens on the right tail of the wealth distribution. The model quantitatively evaluates the potential gains that the Brazilian government could achieve through implementing policies aimed at improving financial accessibility.

This report examines Brazilian policies that partially mitigate the informal economy. Of course, few policies are designed to directly target the informal economy. However,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numerous policies to support low-income and low-wealth households, improve financial accessibility nationwide, secure tax revenues through formalization, and increase aggregate productivity through worker education. All of these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ormal economy.

Next, the report analyzes consumption patterns among Brazilian domestic consumers. Due to Brazil's high level of income inequality, it is common practice to classify households into five groups—A, B, C, D, and E. With Group A representing the highest-income class and Groups D and E representing the lowest-income classes, these polarized consumers tend to exhibit distinct consumption patterns. The report also presents case studies of marketing strategies targeting low-income and low-wealth households as well as top income earners. In general, expanding the consumer base and improving financial inclusion play key roles in low-income marke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consumers rely heavily on the established images of companies.

Finally, we suggest several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s discussed above. Due to the Brazilian government's multifaceted policy efforts related to the informal econo-

my, there is substantial potential for public-sect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Brazil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Ministry of Entrepreneurship, Microenterprise, and Small Business (MEMP), signaling a strong policy commitment to supporting SMEs. In this context, cooperation through Korea'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appears promising. Bilateral programs could also be pursu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which was launched under Brazil's leadership. Moreover, due to the polarized nature of Brazil's domestic consumer market, Korean firms could benefit from entering the Brazilian market through strategies such a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mage-based marketing.

---

<책임>

## 김성환

연세대학교 경제학, 수학, 응용통계학 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 david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공저, 2024)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공저, 2024) 외

---

<공동>

## 홍성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現, E-mail: swh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공저, 2024)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공저, 2025) 외

---

## 김진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중남미지역학 전공)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공저, 2023)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공저, 2024) 외

---

## 박미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남미 지역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misookp@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공저, 2023)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공저, 2024) 외

---

## 손은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現, E-mail: euna@kiep.go.kr)

저서 및 논문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공저, 2025)

「멕시코 사법부 개혁 내용과 판사 직선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공저, 2025) 외

#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 25-01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 김성환 · 홍성우 · 김진오 · 박미숙 · 손은아
  - 25-02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전략과 정책 시사점 / 이권형 · 이현진 · 강반디 · 이다운
- 2024년

  - 24-0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 분석 / 조동호 · 한소라
  - 24-02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략과 정책 시사점 / 박정호 · 강부균 · 강태호 · 제성훈
- 2023년

  - 23-01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재편: 분야별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 설인효 · 우병원 · 유인태 · 이태동 · 차정미 · 최아진 · 한희진
  - 23-02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 김다울 · 최장호 · 김수정 · 이희선
- 2022년

  - 22-01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 김다울 · 김범환 · 한하린 · 이대은
  - 22-0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를 중심으로 / 이무성 · 이승근 · 정세원 · 김신규 · 이하얀
- 2021년

  - 21-01 한·러 경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 김동열 · 조영관 · 박지원 · 송영철 · 정선미
  - 21-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 양문수 · 이춘근 · 이석기
  - 21-03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 민지영 · 타티야나 트칼리치

■ 2020년

21-04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주재우·김현욱·임수호·최원기

20-01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양평섭·이철원·나수엽·오탈현·김영선·윤형준·강유덕

20-02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전환을 중심으로  
정민현·민지영·정동연·김상환

20-03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상남·조영관·김영옥·염동호·김상현·박상준

20-04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이창수·박지원·송백훈·제성훈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일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Understanding the Brazilian Consumer Econom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Government: Large-Scale Informal Economy Involved

Sunghwan Kim, Sungwoo Hong, Jino Kim, Mi Sook Park, Euna Son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는 불가피하다. 브라질은 내수시장이 커 향후 한국과의 협력기회를 고려했을 때 브라질 경제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 경제의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계하여 연결지어 연구하고, 거시경제모형을 설정하여 앞서 언급한 특징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브라질 정부의 비공식 경제 관련 정책과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